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경제적 성과분석과 한국의 진출방안

尹玄德

지역연구회시리즈 00-16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경제적 성과분석과 한국의 진출방안

尹 玄 德

2000. 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문요약

MERCOSUR는 南美南部國家들의 경제문제를 공동으로 타개하며 새로운 글로벌 시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태동하였다. 중남미지역의 정치경제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MERCOSUR는 시장확대에 따른 생산범위의 확장으로 생산체제를 전반적으로 강화시킴은 물론 타 경제블록과의 협상기반을 크게 제고시키는 등 통합체로서의 기반을 공고히 해나가고 있다. 남미 국가들 중 정치 및 경제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그리고 우루과이, 파라과이로 구성된 MERCOSUR는 경제적 비중과 잠재력으로 볼 때 향후 중남미지역에서 그 위상이 더욱 제고될 전망이다.

본고에서는 MERCOSUR의 공고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적 성과의 분석과 이에 따른 각 회원국들의 반응과 정책 그리고 갈등 등을 조명하여 앞으로 MERCOSUR의 향방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을 제시코자 한다.

차 례

국문요약	1
I. 서론	7
II.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구조적 구성배경과 현황	9
1. MERCOSUR의 추진배경 및 설립 과정	11
가. 추진배경	11
나. 설립과정	14
2. MERCOSUR의 설립 목표 및 성격	17
가. MERCOSUR 설립 목표	17
나. MERCOSUR 구축의 기대효과	18
3. MERCOSUR의 협정 내용 및 진행 현황	24
가. 역내관세 철폐	24
나. 대외공동관세(CET: Common External Tariffs) 적용	25
III.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경제적 성과분석 및 평가	27
1. MERCOSUR의 경제성장	27
2. MERCOSUR 회원국의 경제성장	28
가. 브라질	28
나. 아르헨티나	36
다. 파라과이	44
라. 우루과이	47

3. MERCOSUR의 경제성과에 대한 평가	51
가. 교역 증대	51
나. 공동시장 형성을 위한 추가 조치	52
다. 정책 공조	55
라. 산업통합	57
 IV. 남미공동시장(MERCOSUR) 구축에 따른 새로운 통상 및 경제환경	60
1. 세계 시장 통합과 지역무역협정의 강화	60
2. 중남미지역의 자유무역협정	61
3. 1990년대 중남미 경제통합의 재활성화	62
4. MERCOSUR의 확대 가능성	63
5. 남미 경제통합체 추진 전망	64
 V. 남미공동시장(MERCOSUR)에 대한 과제 및 전망	67
1. MERCOSUR의 발전과제	67
2. MERCOSUR의 발전 전망	70
 VI. 韓國-MERCOSUR간 경제 관계 전망	73
 참고문헌	76
 Executive Summary	78

표 차례

<표 2-1> MERCOSUR의 경제규모(1999년 기준)	10
<표 3-1> 소비자 물가지수(12월말 기준 연간 변화율)	31
<표 3-2> 브라질의 FDI 유입액 추이(1990 ~ 98년)	34
<표 3-3> 아르헨티나 거시경제지표	37

그림 차례

<그림 2-1> 주요 경제통합체 및 국별 시장규모(인구 기준)	9
<그림 2-2> 주요 경제통합체 및 국별 경제규모	10
<그림 3-1> MERCOSUR의 실질 GDP 성장률 추이	27
<그림 3-2> 브라질의 GDP 성장률 추이	29
<그림 3-3> 아르헨티나 경제성장률 추이	37
<그림 3-4> 파라과이의 GDP 성장률 추이	45
<그림 3-5> 우루과이의 GDP 성장률 추이	48

I. 서론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부터 진행되어온 남미지역에서의 거시경제적 변화와 더불어 1995년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출범은 중남미 지역의 장기적인 경제구조 변화를 유도해 내는 의미있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다. 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등의 경제블록구축이 현실화되고 WTO체제가 출범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 지역간, 국가간 경쟁과 함께 협력체제의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는 지역적으로 경제, 정치, 안보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편중되어 관심을 보여 왔으며, 이들 지역과의 실질적인 관계 활성화를 도모해 왔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관심대상 밖에 있던 남미지역과의 관계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남미지역은 거대한 소비시장과 풍부한 부존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등 커다란 경제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결코 경시할 수 없는 지역이다.

남미지역은 1990년대 중반부터 정치개혁을 통한 민주화와 경제개혁에 기초한 경제안정 그리고 무역자유화에 따른 수출입확대 등 커다란 변화를 겪어왔다. 이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는 남미지역과의 관계를 단순한 수출입차원에서보다는 장기적인 협력체제의 구축 대상으로서 재정립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MERCOSUR는 南美南部國家들의 경제문제를 공동으로 타개하며 새로운 글로벌시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태동하였다. 중남미지역의 정치경제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MERCOSUR는 시장확대에 따른 생산범위의 확장으로 생산체제를 전반적으로 강화시킴은 물론

타 경제블록과의 협상기반을 크게 제고시키는 등 통합체로서의 기반을 공고히 해나가고 있다. 남미 국가들 중 정치 및 경제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그리고 우루과이, 파라과이로 구성된 MERCOSUR는 경제적 비중과 잠재력으로 볼 때 향후 중남미지역에서 그 위상이 더욱 제고될 전망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MERCOSUR의 공고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적 성과의 분석과 이에 따른 각 회원국들의 반응과 정책 그리고 갈등 등을 조명하여 앞으로 MERCOSUR의 향방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을 제시코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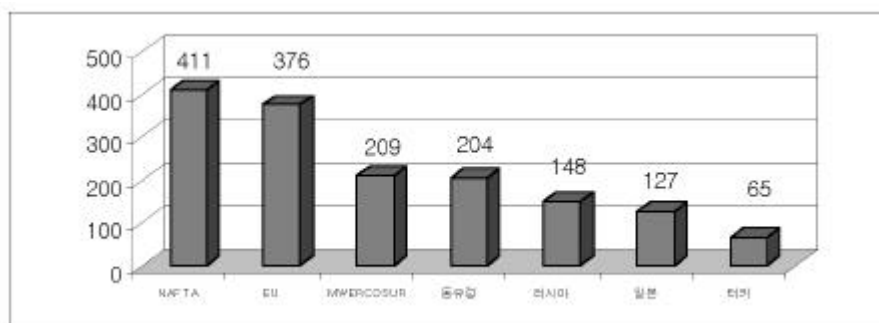
II.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구조적 구성배경과 현황

남미공동시장(MERCOSUR)은 남미지역에서의 자유무역과 관세동맹을 목표로 결성된 경제블록으로서 1991년 3월 파라과이에서 이루어진 아순시온조약에 의해 1995년 1월 1일 공식 출범하였다. 현재 MERCOSUR는 회원국으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및 우루과이, 준회원국으로 칠레와 볼리비아로 구성되어 있다.

MERCOSUR는 1960년 이후 지속되어온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통합노력이 가장 큰 결실을 본 사례로서 1991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간의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시발로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날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유럽연합(EU), 일본에 이어 세계 4위 규모의 시장으로 부상하였다.

<그림 2-1> 주요 경제통합체 및 국별 시장규모(인구 기준)

(단위: 백만 명)



자료: 아르헨티나 외무부 국제경제센터(CEI)

10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경제적 성과분석과 한국의 진출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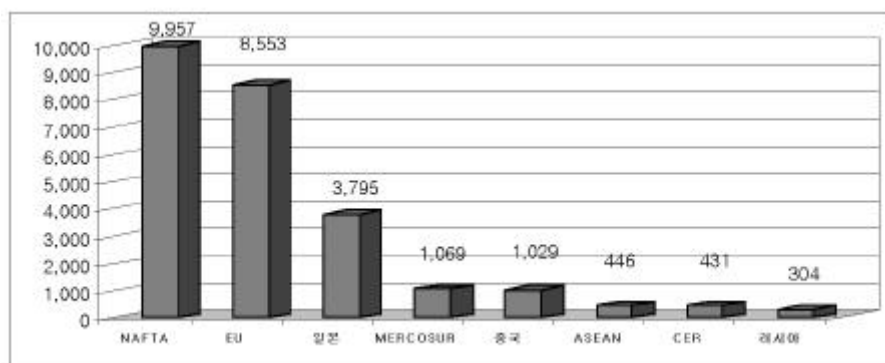
<표 2-1> MERCOSUR의 경제규모(1999년 기준)

	인구 (백만명)	GDP (억달러)	1인당GDP (달러)	총수출 (억달러)	총수입 (억달러)
브라질	163.7	5,197	3,208	468	487
아르헨티나	36.6	2,835	7,747	236	242
우루과이	3.3	207	6,272	22	32
파라과이	5.4	81	1,500	27	28
칠레	15.0	689	3,926	156	140
볼리비아	8.1	83	1,024	9	13
합 계	232.1	9,092	3,946	918	942

자료: 월간 『중남미정보』

<그림 2-2> 주요 경제통합체 및 국별 경제규모

(단위: 10억 달러)



자료: 아르헨티나 외무부 국제경제센터(CEI)

MERCOSUR는 1995년 1월부터는 수입품목별로 0~20%, 그리고 평균 14%의 대외공동관세를 부과하는 관세동맹으로 발전하였고, 1996년 6월에

는 칠레가, 12월에는 볼리비아가 차례로 MERCOSUR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MERCOSUR는 중남미에서만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권 경제통합체중 가장 강력한 협상력을 지닌 블록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1991년 출범 이래로 MERCOSUR는 남미지역 경제성장과 통합의 상징이었으며, 회원국의 교역량은 1990년 40억 달러에서 1997년 180억 달러로 급증하였으나 최근 MERCOSUR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경기침체는 그 동안의 MERCOSUR의 발전과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1998년 MERCOSUR는 출범이래 최초로 회원국간 교역량의 감소를 기록했고, 1999년에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양국의 산업생산의 급격한 위축으로 인한 경기회복의 불투명으로 최대의 고비를 맞았다. 1999년 브라질의 자유변동환을 도입은 MERCOSUR의 무역구조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고 아르헨티나는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2000년 4월 양국은 경제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MERCOSUR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MERCOSUR를 확대, 발전시켜 나갈 새로운 방안들을 모색하는데 합의하여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1. MERCOSUR의 추진배경 및 설립 과정

가. 추진배경

MERCOSUR의 형성은 회원국에게 새로운 국제적 안목과 시야를 확대해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남미의 비 회원국들에게도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남미국가들이 MERCOSUR결성을 통하여 NAFTA, EU, 그리고 남미의 여타국가들과의 협상력을 제고하

여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은 물론 이 지역의 새로운 역할과 위상을 국제사회에 제시하는 계기로 삼고자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주축이 되어 추진된 NAFTA결성은 세계경제의 불력화 추세에 대한 자기 방어적 조치였다. 그러나 NAFTA협정은 미국시장에서 남미산 상품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남미국가들의 대미 수출품목들은 많은 타격을 받을 것과 남미국가들에 대해 미국시장이 갖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그 파급효과는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1990년 7월 부시 미대통령은 교역, 투자, 외채를 중심으로 중남미와의 관계개선을 추진하고자 미주통합에 관한 조치(The Initiative for Americas)를 선포하였다. 북미와 남미 두 대륙에 연계하여 자유무역지대 결성을 시도하고, 이 지역 시장에 자본 유입과 국제투자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외채부담을 감소시킨다는 구체적인 계획이었다. 미국측의 이러한 조치는 한편으로는 세계적 경제 불력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적 대응결과이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남미 지역경제에 새로운 기대와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미와 남미간에 연계하여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되면 관세와 비관세장벽이 해소됨으로써 남미상품의 북미시장 진출의 기회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여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페루, 칠레, 볼리비아, 코스타리카, 베네수엘라, 에콰도르는 이미 기본 협정을 초안하여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에 관한 논의를 시작한 바 있으며, MERCOSUR 회원국들의 경우 역내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지는 대로 NAFTA와의 연계를 추진할 방침으로 있다.

그러나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MERCOSUR 회원국들이 NAFTA 회원국으로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며, 경제안정의 기초를 쌓아가고 있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도 아직 불확실한 요소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어서 MERCOSUR가 가까운

시일 내에 NAFTA와 직접 연계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다소 느리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추진해온 대로 개방경제체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하고 역내 경제의 활성화를 달성하게 된다면, 또한 주변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여 MERCOSUR의 영역이 확대된다면 NAFTA에 대한 협상력이 크게 신장될 것이고, 두 지역간에 연계된 자유무역지대의 형성은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남미와 EU의 관계도 북미와의 통상 및 교역관계에서 나타난 양상과 매우 유사하다. 남미경제에 미치는 유럽의 비중은 계속해서 감소추이를 보여왔으며, 특히 1980년대에는 유럽경제의 침체와 남미의 외채문제 및 경제악화로 인하여 양 대륙간의 통상 및 무역관계는 저조하였다. 그 결과 지난 1970년대 남미지역의 EU 지역에 대한 수출의존도는 평균 28%수준이었으나 1980년대 중반에는 불과 19%수준으로 크게 감소되었다. 그러나, EU의 결성은 관계개선에 새로운 국면을 조성하고 있고, 남미국가들의 수출신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EU 역내국가들이 보유하는 비교우위와 역내국가들 간의 보완적 관계로 인하여 남미상품의 수출이 오히려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나, MERCOSUR 회원국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민주화, 민영화, 개방화 현상은 외부와의 정치적, 경제적 교류를 증진시킴으로써 EU 지역과의 교역이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더 우세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MERCOSUR 회원국들의 EU와의 경제적 교류를 현재의 정치적 관계 수준으로 높이고, 각 회원국들의 입장을 사전에 조율하여 EU와의 모든 협상에서 공동전략을 추진하도록 하며, 기술 및 금융 면에서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수출신장의 수단으로 사용, EU의 요구수준에 합당한 품질수준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나. 설립과정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남미지역에서 역내국가들간에 추진되어온 주요 경제통합 관련 기구를 보면, 중남미 자유무역연합(LAFTA), 중남미 통합연합(LAIA), 브라질-아르헨티나 통합협약, 안데스공동시장(ANCOM), 칠레-멕시코 자유무역협정, 미주통합구상 등을 들 수 있고 중미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상당히 많다. 이와 같이 중남미지역에서 경제통합이 빈번하게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국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원래의 기구창설의 목표에 비하여 그 추진성과가 크게 못 미치거나 그 파급효과가 그리 크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4개 회원국과 칠레와 볼리비아를 준회원국으로 하는 MERCOSUR는 지난 1995년 1월에 출범하여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MERCOSUR 형성이 시장규모확대, 상품 및 부품의 표준화, 산업구조의 재편, 직접투자 및 전략적 제휴의 증가 등 기업의 경쟁환경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제규모가 남미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이 지역의 대다수 국가가 참여하는 종래의 다자간 무역체제 하에서 무역증진을 활성화하기보다는 우선 양국간의 교역증대를 통하여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실리 추구적인 입장에서 출발하여 MERCOSUR 협정을 가능케 하였다. 특히 MERCOSUR의 주축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1990년대 들어 과거의 보호주의적인 경제체제를 시장 지향적인 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거시경제 안정과 성장을 이룩함으로써 더욱 활성화되고 있어 그 발전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2차 대전 이후 여타의 중남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수입대체 정책을 위주로 내부지향적인 경제정책을 추구하여 왔다.

이에 따라 이들은 자국유치산업의 발달을 위하여 높은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대외적으로 구축하였다. 그 결과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다소의 경제성장을 성취할 수 있었으나, 장기적으로는 결국 비효율적이며 불안정한 경제를 구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각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세계시장 진출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국의 관세 및 투자장벽을 과감하게 축소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우루과이라운드와 같은 국제협상에서 남미국가들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에도 양국은 외교적으로 공동보조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외채협상과 인플레이억제를 위한 경제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각기 상대국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는 점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개방 경제체제의 도입과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국제적인 대세였으나, 다자간 무역체제하에서는 각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려 단시일 내에 시장통합의 효과를 달성할 수 없음을 인식하게 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우선 양국간의 경제통합을 추진하기로 합의를 보았던 것이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경제협력 강화는 1985년 양국간에 ‘이과수(Iguacu) 선언’을 계기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어 양국은 1986년에 경제협력을 위한 12개 의정서에 서명하였으며, 1988년에는 통합협력발전조약(Treaty for Integration,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을 체결하여 양국간의 경제통합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 同 조약은 양국간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점진적인 철폐와 거시경제정책의 조율을 통해 향후 10년 내에 양국 공동시장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 중남미의 신자유주의(민영화, 규제완화, 무역자유화) 물결이 확산되면서 브라질의 콜로르(Fernando Collor de Mello) 대통령과 아르헨티나의 메넴(Carlos Menem) 대통령은 양국간의 경제협력 강화를 더욱 가속시켰다. 이에 따라 1990년 7월에 양국정상은 경제통합의 일정을 앞당기는 부에노스 아이레

스협정에 서명하여 1995년 1월 1일까지 양국 시장통합을 완성하기로 합의하였다. 1990년 8월에는 양국과 경제의존도가 높은 파라과이와 우루과이가 이에 공동참여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지역통합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어 4개국 정상은 1991년 3월 26일 파라과이의 수도 아순시온에서 지역경제통합의 근간이 되는 아순시온조약(Treaty of Asuncion)을 체결하였는 바, 同 조약은 1994년 12월말까지 회원국간에 자유무역지대 및 관세동맹을 형성하고, 1995년 1월 1일부터 회원국간에 점진적인 협상을 통해 공동시장으로 발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4개국 정상은 4년간의 협상을 거쳐 1994년 12월 기본협정에 서명함으로써 1995년 1월 1일 MERCOSUR가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현재 중남미에는 MERCOSUR, 안데스공동시장(ANCOM: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 중미공동시장(CARICOM: 온두라스, 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카리브해공동시장(CARICOM: 카리브연안 15개국), G3(멕시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 여러 형태의 경제통합기구들이 결성되어 회원국간 통합을 가속화하고 있다.

MERCOSUR가 완성되기까지에는 만성적 인플레이, 회원국간 환율조정체제 결여, 정치적 불확실성, 경쟁적 생산구조 등 극복되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어 아직 그 효과와 영향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MERCOSUR의 잠재성을 확인한 외국인투자의 쇄도, MERCOSUR 회원국들과의 협력과 제휴에 대한 관심 등을 볼 때 MERCOSUR 경제통합의 성공여부와 이를 통한 회원국들의 경제 안정 등을 기대할 수 있다.

2. MERCOSUR의 설립 목표 및 성격

가. MERCOSUR 설립 목표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4개국은 MERCOSUR 형성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목표를 다음과 같이 아순시온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다.

① 경제통합을 통한 시장확대는 이 지역 경제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② 이러한 목표는 상호 거시경제정책의 조율과 보완성의 유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③ 경제통합을 통한 시장확대는 국제적 추세로서 많은 국가들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강화를 시도하고 있고, ④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경제통합의 추진은 시의 적절한 대응조치이다. ⑤ 4개국의 협정은 향후 점차적으로 전체 중남미경제통합에 기여할 조치로서 인식되어야 할 것이며, ⑥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 질을 개선함으로써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각 회원국의 과학진흥과 경제의 현대화가 달성되어야 함을 확신한다. ⑦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상이한 국민들 간의 유대를 강화할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정치적인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같이 한다.

MERCOSUR는 초기에 자유무역지대에서 관세동맹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회원국들간에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으로 발전하는 다단계 목표를 두고 있다. 아순시온 조약에서부터 MERCOSUR가 설립되기 전인 1994년 말까지의 과도기는 자유무역지대의 형성단계로 볼 수가 있고, 현재 MERCOSUR는 대외공동관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일정기간 예외품목 규제를 두고 있어 불완전한 관세동맹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MERCOSUR는 공동시장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지만 경제통합단계로 볼

때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 완전한 의미의 공동시장(Common Market)에 도달하지는 못하였다. MERCOSUR는 1991년 역내 상품교역에 대한 관세 철폐를 통한 자유 무역지대(FTA: Free Trade Area)로 출범하여 1995년부터는 대외공동관세(CET: Common External Tariffs) 설정을 통해 관세동맹(Customs Union)의 형태로 발전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장기적 목표인 공동시장형성을 위한 노력도 부분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아직 역내 관세가 모두 없어지지 않았고 대외공동관세 적용도 통일되지 않아 관세동맹으로서의 통합도 불완전한 상태이다.

나. MERCOSUR 구축의 기대효과

상호협력과 상호의존의 필요성이 증대하면서 MERCOSUR는 원래 공동시장을 지향하고 추진되었으나, 현재의 상황에서 보면 아직 관세동맹의 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경제통합의 수준이 공동시장이나 경제동맹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생산요소가 가맹국간에 자유롭게 이동하게 되며 이에 따라 생산요소의 최적사용이 가능하게 되고, 가맹국간에 금융 및 재정정책의 조화가 달성됨으로서 경제의 효율성이 일층 더 제고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효과에 추가하여 고려되어야 할 MERCOSUR형성의 효과는, 자유무역협정이나 관세동맹을 창설할 경우 무역창출 효과와 무역전환 효과가 일반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이다. 무역창출 효과란 이러한 경제통합이 일어날 경우 가맹국이 이제까지 서로 간에 부과하여 오던 무역제한조치를 철폐 또는 완화함으로써 가맹국의 무역이 확대되는 효과를 말한다.

무역전환 효과란 MERCOSUR 회원국들이 공동시장을 형성하게 됨에

따라 종전에 역외국가들로 부터의 수입이 역내국가들 간의 교역으로 전환되는 효과를 말한다. 한편으로는 MERCOSUR 역내기업들에게 유리한 제품 및 기술표준, 관세 및 현지조달비율의 강화 등을 통한 역외기업에 대한 차등대우로 인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역내시장완성의 결과로 유발될 역내기업들의 생산성 및 경영효율 향상에 기인하여 이러한 무역전환효과는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무역전환효과 또한 역내시장규모의 확대에 기여하는 한 요인이 된다.

관세동맹 및 공동시장의 형성은 거시 경제적인 관점에서 파악되는 제반 효과 이외에 주요 경제단위인 기업의 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경쟁환경여건에 많은 변화를 초래한다. MERCOSUR 형성이 시장규모확대, 상품 및 부품의 표준화, 산업구조의 재편, 직접투자 및 전략적 제휴의 증가 측면을 중심으로 기업의 경쟁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시장규모확대

아순시온 협약 이래로 많은 이견과 잡음이 발생하였으나 이들 회원국들은 공동시장형성을 위한 조치들을 꾸준히 취하여 왔고 그 결과 회원국 간의 교역은 크게 증가하였다.

브라질은 아르헨티나의 최대 수출국이며, 아르헨티나는 브라질의 제2의 수출시장이고, 석유공급원이다. 아르헨티나의 브라질에 대한 수출이 최근 급증하면서 무역수지상의 적자가 대폭 감소되는 가운데 양국간의 무역수지도 균형을 이루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역내교역의 급증현상은 역내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시장규모의 대폭 확대를 뜻한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간의 교역이 급증한 것은 양국의 경제가 서로 보

완적인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는 에너지 생산량이 풍부하여 사우디 아라비아에 이어 브라질에 두 번째로 많은 석유를 공급하는 나라이다. 또한 아르헨티나는 곡물생산량이 자체수요를 크게 능가하는 반면, 브라질은 곡물 수입국으로 산업구조가 매우 보완적인 측면이 강하다. 아르헨티나의 산업설비는 이미 매우 낙후되어 아르헨티나의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보다 훨씬 큰 브라질 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필요하며, 브라질의 산업은 아르헨티나에 비해서 보다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기에 기존의 브라질 소비자 1억 6천만 명에 3천 3백만 명의 아르헨티나의 소비자를 추가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은 양국 기업들에게 시장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매력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MERCOSUR의 출범에 따른 시장규모의 확대현상을 분석함에 있어 공동시장형성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문과 그렇지 못한 부문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공동시장의 규모를 보면 역내 인구 1억 8천 6백만 명, 총 면적 1천 2백만 평방 킬로로서 상당히 큰 규모이지만, 고르지 못한 도시발달 상황 및 교통과 통신 등의 인프라에 관한 여건을 감안할 때 실제로 초기단계에서는 역내 인구와 지역전부가 MERCOSUR의 영향을 직접 받게 되지는 못할 것이며, 실제 공동시장의 혜택을 받게 될 지역의 면적과 인구는 상당히 축소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MERCOSUR에 의한 긍정적인 영향은 우선적으로 4개국의 접경지역과 소비가 집중된 대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향후 발전단계에 따라 점차적으로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브라질의 경우는 경제권이 집중된 중동부 지역(쁘르뚜알레그리, 벨루오리존찌, 리우데자네이루를 연결하는 지역)이 우선적으로 MERCOSUR의 영향권에 속하고, 아르헨티나는 꼬르도바, 멘도사, 네우깅, 바히아블랑까를 잇는 경제권이 수혜 지역에 속한다. MERCOSUR의 중간지역에 해당되는 파라과이와 우루과이의 모든 영토를

포함시키면, 실질적으로 MERCOSUR의 수혜지역은 인구 1억 명 규모의 시장으로서 평균 국민소득 약 4,600 달러, 총 GDP 약 4,6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기대할 수 있다.

2) 상품 및 부품의 표준화

MERCOSUR 형성으로 예견될 수 있는 주요 현상의 하나는 생산, 판매, 유통, 광고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종전에 비하여 국가별로 차이를 두지 아니하고 제품을 표준화하여 공급하는 경향이 증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회원국간에 자유로운 상품이동이 가능하게 되고, 기술 및 제품표준의 공동설정이 추진됨에 따라 종래에는 개별국가 중심으로 경영 전략을 추진해 왔지만, 이제 공동시장 전체를 단일시장으로 간주하며 경영 전략을 펼치는 기업들이 날로 증가하게 되며, 많은 기업들이 표준화된 제품의 생산규모를 증대시켜 생산공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부분적으로 이미 회원국 기업들의 전략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예를 들어 Volkswagen과 Ford의 합작회사인 Autolatina는 종전에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각기 개별시장으로 취급하였으나 이제는 양국시장을 하나의 시장으로 간주하고 모든 부품과 제품을 표준화하기로 하는 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회사는 아르헨티나의 꼬르도바(Cordoba) 소재의 신설공장에서 생산하는 트랜스미션을 이 회사가 브라질에서 생산하는 중형차들에 장착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식품회사들도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 브라질의 최대 식품회사의 하나인 Sadia는 아르헨티나의 한 회사와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합작 기업을 설립하여 자사상품의 유통을 관장하도록 하였다.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지역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이 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기업과의 합작을 추진한 것이다.

역내 국가들 간의 교역의 증대와 관광 등을 통한 접촉의 증대는 이 지역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의 모방과 동일화를 촉진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또한 기업측의 상품 및 부품의 표준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3) 산업구조의 재편

역내 산업구조에 대한 변화가 공동시장 형성에 따른 효과만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우며, 특히 오랜 기간 수입대체 정책을 추구하며 국내시장 위주의 폐쇄적 경제정책을 추진해오던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대외 지향적인 경제체제를 도입하는 단계에서 MERCOSUR가 출범하게 된 것이며, MERCOSUR 없이도 이들 국가들의 교역은 증대되었을 것이고, 산업구조의 재편이 진전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MERCOSUR의 형성은 이러한 현상들을 더욱 촉진하는 요인임에는 틀림이 없다.

공동시장의 형성과 더불어 상품, 노동 및 자본의 국가간 이전이 자유로워지고, 상품 특성 및 소비특성이 표준화됨에 따라서, 기업들이 추구하는 전략적 시장단위의 규모가 증대하게 되면, 그 결과로서 기업의 생산 및 영업단위도 확대될 것이다. 생산 및 영업단위의 확대현상은 이미 진행되기 시작하였고 향후 더욱 가속화되리라 전망된다. 생산 및 영업단위의 확대는 두 가지 차원의 통합에 의해서 진행된다.

첫째, 개별 기업내의 제조부문 및 유통부문 간에 현재보다 큰 규모를 갖추음으로서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의도에서 기업 내부적으로 각 부서간 또는 생산단위간에 추진되는 통합이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많은 기업들이 보유 운영하게 되는 생산 및 유통시설은 종전에 비하여 그 수는 감

소되는 반면에 그 규모는 증대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국경에서의 통관절차에 현재 소요되는 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고 있고, 철로표준의 차이 및 트럭운송에 관한 규제로 인하여 국경을 넘을 때에 현지의 운송수단으로 바꾸어 적재하고 운송해야 하는 많은 번거로움과 비 능률이 존재하고 있는데, MERCOSUR 창설과 더불어 이러한 점들이 개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역내 국가간의 운송효율이 제고되고, 화물운송에 소요되는 시간에 관하여 어느 정도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게 되면, 유통비용의 절감과 물류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며, 그 결과 물류 및 유통부문의 관리도 종전에는 개별시장 단위로 이루어지던 것이 공동시장 단위로 집행될 것이다.

둘째, 경제통합의 결과로 시장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기업들 간에 합병 및 매수를 통해 생산의 효율성 및 시장 장악력의 제고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 집중화 현상이 진전될 것이며, 기업들 간의 합병과 매수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시장통합 조치의 산업별 영향을 단정짓기는 어려우나, 그 영향의 크고 작음을 예측하는데는 몇 가지 지침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산업들에서 공동시장 형성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즉, ① 규모의 경제효과가 현저한 산업, ② 잉여생산설비의 비중이 높은 산업, ③ 대규모의 연구개발투자가 필요한 산업, ④ 광고 및 판매촉진활동의 한계효과가 체증적으로 나타나는 산업, ⑤ 역외국가로부터의 경쟁압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산업, ⑥ 현재 회원국간에 높은 무역장벽이 구축되어 있는 산업, ⑦ 회원국간에 가격차이가 큰 산업, ⑧ 기술표준에 의하여 직접 영향을 받는 산업, ⑨ 변화의 필요성이 인지되어 온 산업 등은 공동시장형성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① 경쟁의 범위가 이미 범세계적인 산업, ② 회원국

별로 소비자의 취향이 큰 차이를 보이는 산업, ③ 현존 무역장벽에 의하여 제약받는 바가 별로 없는 산업, ④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문이어서 무역장벽의 철폐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문(예를 들면 의약품산업), ⑤ 시장통합조치와 관계없이 앞으로도 국가별로 보호되는 산업 등에 있어서는 시장통합의 영향이 그리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외기업에 의한 직접투자 및 전략적 제휴의 증가로 회원국들의 외채 문제가 개선되고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좋아지면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MERCOSUR 회원국들이 현재의 개방 경제체제를 지향하는 정책을 지속하며 공동시장형성을 위한 단계적 조치들을 계속해서 취해 나간다면, 역내시장이 제공하는 매력에 이끌려 시장확보, 생산효율성확보 및 자원확보를 목표로 하는 외국인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3. MERCOSUR의 협정 내용 및 진행 현황

가. 역내관세 철폐

MERCOSUR 회원국들은 1차적으로 자유무역지대(FTA: Free Trade Area)를 창설하기 위하여 1991년 6월부터 1994년 12월까지 역내 상품교역에 대한 수입관세를 점진적, 자동적, 포괄적으로 철폐할 것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1994년 말까지 역내조달비율 60%이상을 충족시킨 역내상품에 대해 대부분의 관세가 철폐되었다. 그러나 일부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회원국의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1999년 12월말까지 관세철폐가 연기되었다.

나. 대외공동관세(CET: Common External Tariffs) 적용

1995년 1월 1일부터는 역외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0~20%의 공동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함으로써 MERCOSUR가 관세동맹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자본재, 컴퓨터 및 관련 소프트웨어, 위성통신설비에 대해서는 국내산업보호를 목적으로 대외공동관세 적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각 회원국들이 상당기간 각자의 관세를 적용할 수 있게 하였다.

먼저 자본재에 대해서는 회원국간 경제규모 및 발전단계의 차이를 감안하여 국가별로 차등을 두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경우 2001년 1월까지, 파라과이와 우루과이의 경우 2006년 1월 1일까지 대외공동관세를 14%로 통일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컴퓨터 및 관련 소프트웨어와 위성통신설비에 대해서는 대외공동관세를 2006년 1월 1일까지 16%로 일치시키기로 했다.

자동차부문에 대해서도 예외가 적용되어 MERCOSUR 자동차공동규범(Common Automotive Regime)이 시행되어 왔다. 당초 동 자동차공동규범은 2000년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1999년의 브라질-아르헨티나간의 무역분쟁으로 2004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그때까지 역내 자동차시장이 보호를 받게되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생산업체 대표들은 1999년 8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2000년 1월부터 역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해 35%의 대외공동관세를 계속 적용하고, 자동차부품 수입에 대해서는 종류별로 14%, 16%, 및 18%의 대외공동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MERCOSUR 역내조달비율(Minimum Regional Content Requirement)은 60%(신모델의 경우 50%)로 정하되 아르헨티나의 경우는 부품산업 보호를 위해 역내조달비율 60%중 30%는 아르헨티나산 부품을 사용토록 하는데 합의하였다.

한편 1997년 11월 아시아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아르헨티나는 2000년 12

월 31일 까지 대외공동관세를 종전의 0 20%에서 3 23%로 3%포인트 인상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공동시장이사회(CMC)가 이를 승인하였다. 이 조치에 따라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대외공동관세를 전면 인상하였으나 파라과이와 우루과이는 선택적으로 적용해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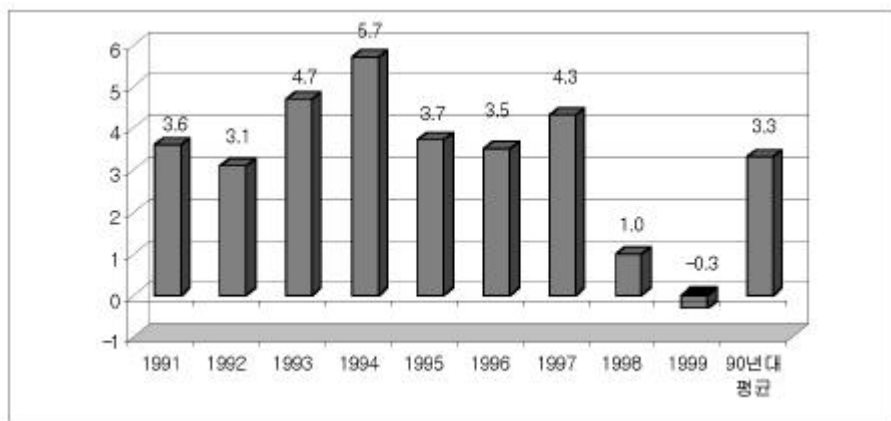
III.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경제적 성과 분석 및 평가

1. MERCOSUR의 경제성장

MERCOSUR 회원국들의 전체 경제성장률을 보면 1995년 이전까지 통합에 대한 기대감과 각 회원국들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전체 시장의 규모와 함께 각국의 경제성장률도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1995년 이후 각 회원국의 내부적인 정치적 문제, 산업 구조적 문제와 아시아 금융위기 여파 및 브라질의 헤알화 평가절하 등 외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전체적인 GDP 성장률이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MERCOSUR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3.3%에 달했다.

<그림 3-1> MERCOSUR의 실질 GDP 성장률 추이

(단위: %)



1999년에 MERCOSUR 회원국들은 기록적인 저물가를 실현했다. 1999년 각 회원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아르헨티나의 물가는 1934년 이래 최저치인 -1.8%를 기록했으며, 브라질의 물가도 예외적으로 1998년 1.65%보다 높은 8.94%를 기록하기는 했으나 2000년에는 다시 6%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루과이의 물가도 반세기만에 최저치 이자 1998년 물가의 절반수준인 4.17%를 기록했다. 파라과이의 물가도 1998년 14.6%에서 크게 하락하여 1976년 이래 최저치인 5.4%를 기록하였으며, 칠레의 물가는 1998년보다 2.4%포인트 떨어진 2.3%를 기록하여 1938년 소비자물가지수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칠레에서 물가는 1990년 27.3%를 기록한 이래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2. MERCOSUR 회원국의 경제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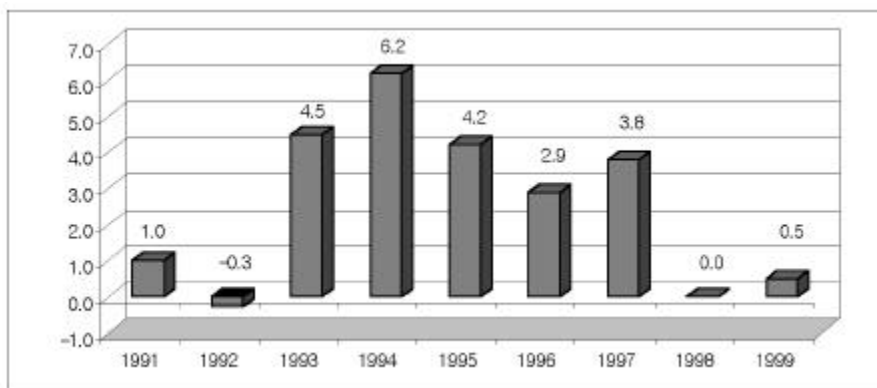
가. 브라질

1) 경제성장률

MERCOSUR의 핵심 국가로서, 중남미 최대 공업국가인 브라질 경제는 경제개혁정책의 추진에 힘입어 1990년대 초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접어들면서 1993-94년간 4-6%대의 안정적인 성장을 달성하였다. 투자율과 저축률도 투자심리의 회복, 물가 안정 기대감을 반영하여 꾸준히 향상되어 산업생산의 확대기반을 뒷받침하였다.

〈그림 3-2〉 브라질의 GDP 성장률 추이

(단위: %)



그러나 개혁정책의 핵심인 헤알(Real) 플랜이 환율의 과대평가를 가져와 국내 소비급증을 유발함에 따라 정부가 1995년 말부터 고금리 정책 등을 통해 소비수요 관리, 수입규제 등 경기 진정책을 펼치면서 경제성장 속도는 다소 둔화되었다.

부문별로 보면 그 동안 성장을 주도해 온 제조업 분야가 부진한 양상을 보인 반면 서비스업 분야는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해 오고 있다. 1990년대 중반의 약간 저조한 경제성장 추세는 이러한 제조업 성장의 부진과 밀접히 연관되었으며, 농업은 국제 가격하락과 작황 부진 등으로 다소 위축되었다.

1999년 GDP는 1998년 대비(7,760억 달러) 28.48% 감소한 5,550억 달러에 그쳤는 바, 이 결과 브라질의 경제규모는 1998년에 세계 8위에서 10위로 후퇴하였다. 브라질의 GDP 감소의 주요 원인은 헤알화 평가절하와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불황에 기인했다. 러시아 외환위기가 발발한 1998년 3/4분기에 마이너스로 반전된 분기별 경제성장률은 1999년 3/4분기에 플

리스 1%로 반전되었고 4/4분기에는 4.2% 성장하였다. 브라질 경제는 1999년 전체적으로는 0.5% 성장했다. 경기회복세를 주도하고 있는 분야는 헤알화 평가절하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수출산업과 수입대체산업이다.

브라질의 경제상황은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둔화,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역내 금융시장 혼란 및 외국인투자 감소, 재정적자 과중에 따른 정부의 긴축정책 실시, 역내 국가간의 수출입 감소 등으로 악화되었다. 특히 1998년 11월 IMF로부터 415억 달러의 긴급차관을 통해 헤알화 평가절하 압력을 일시적으로 수습하였으나 1999년 초 미나스 제라이스州 정부의 연방정부에 대한 모라토리엄 선언 및 일부 주 정부들의 동조 움직임으로 평가절하 압력이 거세어 짐에 따라, 브라질 연방정부는 1월 15일 변동환율제를 도입하였다. 변동환율제 도입 이후 달러대비 헤알화 가치 하락 그리고 추가적인 헤알화 가치 하락을 우려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외화유출 등 금융시장이 극심한 혼란에 빠지며 브라질의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1999년에 이룩한 경제 안정기조위에 헤알화 평가절하 효과로 인한 수출 확대, 금리인하에 따른 기업의 투자증가, 국제 농산물 및 원자재 수요 증가와 가격 상승 등의 여건과 1999년 하반기의 세계경제 회복으로 2000년 경기는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였다. 브라질 경기는 1999년 예상보다 빠른 IMF 위기 극복, 원만한 구조조정과 국가신인도 회복에 따른 꾸준한 외국자본 유입의 증가 등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상승하였다. 인접국 아르헨티나의 경제불안, 불안정한 국제유가 등이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물가, 환율, 금리, 산업활동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산업생산도 증가하고 있다.

브라질 경제는 2000년에 10%대의 금리 수준 진입, 건설한 재정수지 흑자 실현, 환율의 평가절하와 금리인하에 따른 수요자극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정세를 유지하는 등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0년 경제성장률은 4%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제조업 5.6%, 농업 2.5%, 서비스업이 3.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물가

물가는 1993년까지 매년 3자리 수 이상의 초 인플레이션 현상을 나타냈으나 1994년 7월 화폐개혁 이후 경제 안정화정책이 주요한데다 곡물작황의 호조와 수입 개방 등에 힘입어 크게 진정되고 있다. 그동안 브라질의 물가폭등은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통화증발과 화폐가치 급락에 따른 현물자산 및 소비 선호 등에 크게 기인하였다.

브라질의 물가 상승은 1993년 2,500%에 달한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 1995년에는 약 22%에 달했으며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여왔다.

〈표 3-1〉 소비자 물가지수(12월말 기준 연간 변화율)

(단위: %)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소비자 물가지수	478.8	1,149.1	2,489.1	929.3	22.0	9.1	4.3	2.5	8.9

자료: 브라질 통계청(IBGE)

1999년 물가는 해알화 평가절하 이후 수입가격 상승 등의 영향에 따른 유류가격의 상승, 공공요금의 인상, 농산물 가격 상승 등의 물가불안요인 등으로 인상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당초 예상보다 낮은 8.9% 수준

에 머물렀다. 2000년 상반기까지 물가상승률은 3.32%를 보였으며, 산업생산과 수출 등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소비수요는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어 브라질 정부는 2000년 물가목표를 당초 6% 수준보다 낮은 5.5% 수준으로 전망했다.

3) 금리

브라질 정부는 1999년 초 외화유출 방지를 위해 고금리정책을 실시(최고금리 1999년 3월 45%) 하였으나, 경기 침체와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고 1999년 3월부터 점차 외환위기로부터 벗어남에 따라 이자율을 점차 인하하여 1999년 말 중앙은행 기준금리는 연 19% 수준에 이르렀다. 2000년에는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중앙은행 기준 금리를 점차 인하, 2000년 8월 현재 16.5%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물가가 안정세를 보일 경우 2000년 하반기에는 16% 수준까지 인하할 것으로 예측된다.

4) 환율

환율은 연초 외환위기 이후 만기 도래한 외채금액, 정치권 분열에 따른 경제정책 혼선, 연료가격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연 우려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하여 대미달러화 대비 16 2.3헤알 수준을 오갔으나 하반기 이후 대내외 경제여건이 개선되면서 달러당 1.83헤알 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환율불안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고는 1999년 3월 말 338억 달러의 최저점을 보인 이후 공기업 민영화 추진에 따른 외자 순 유입 증가, IMF 등 서방선진국 지원금 98억 달러와 브라질 정부의 30억 달러 공채 발행 등에 힘입어 점차 증가하여 1999년 말에는 약 42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브라질은 1998년 말 기준 총 외채잔액이 2,013억 달러(GNP의 30%)를 기록하는 등 외채규모 면에서 세계 제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1999, 2000년 중 외채 원리금 상환액이 각각 483억 달러, 112억 달러로 총 외채잔액(1998년 말 기준)의 30%에 달하고, D.S.R도 평균 40%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여전히 과중한 외채상환 부담을 안고 있다.

1999년 1월 변동환율제로 전환한 이후 한때 미화 1 달러당 2.17 헤알까지 치솟았던 환율은 정부의 적극적인 외화유치 정책 실시 및 외국인 투자 확대 영향으로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0년에는 경제회복과 외국자본의 지속적 유입 등으로 1.7 1.9헤알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5) 재정

대규모의 재정 및 대외적자는 1998년 국제적인 격동기에 브라질 경제를 매우 취약하게 만들었다. 정부가 강도 높은 대응조치를 채택함으로써 경제성장률이 0.5% 수준으로 후퇴하였고 이에 따라 1인당 GDP도 0.8% 감소하였다. 러시아 경제의 붕괴는 대규모의 자본유출, 국제금융에 대한 접근 상실 및 브라질 외환시장에서의 급격한 변동을 야기하면서 아시아 위기로 인한 충격을 다시 겪게 했다. 세수증대, 공공부문의 축소, 사회 및 투자지출에 대한 예산 삭감 등을 통한 브라질 정부의 재정개혁의 노력 결과, 2000년의 재정수지 흑자 목표(368억 헤알, GDP의 3.25%)는 무난히 달성될 전망이다.

6) 외국인투자

브라질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액은 1990년대 초반 이후 경제안정화 및 개방화정책에 힘입어 1994년 30억 달러 수준에서 1997년 196억 달러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1998년에는 240억 달러를 상회했으며, 중남미지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최대 선호국으로 자리잡고 있다.

〈표 3-2〉 브라질의 FDI 유입액 추이(1990 ~ 98년)

(단위: 백만 달러)

국 가	1990 ~ 94평균	1995 ~ 97평균	1996	1997	1998e
아르헨티나	2,931	5,400	5,090	6,326	5,800
브라질	1,703	11,904	11,200	19,652	24,000
파라과이	118	151	106	191	210
우루과이	69	151	137	160	160

자료: CEPAL

브라질의 경우 경제가 호전되면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1994년부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1994년 한해 31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약 2.4배 팽창하였으며, 1995년에는 약 49억 달러에 달했다. 브라질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급증은 브라질 경제의 안정 및 인플레이션 하락, 남미공동시장의 출범, 범 미주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기대감, 경제정책의 전환(독점규제, 민영화), 내외국 자본의 동등 대우, 브라질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이 주된 배경이 되고 있다.

브라질에 대한 투자를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부문에 투자의 약 58%가 집중되어 있으며, 금융·보험 등 서비스 분야가 37%를 점하고 있는 반면 광업 등 1차 산업 부문은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의 조

사에 의하면 최대의 투자가 이루어질 분야는 자동차 산업이며 이 밖에 화학·의약, 철강에도 각각 대규모투자가 예상되는 분야이다.

2000년 상반기 집계결과 對브라질 주요 투자국은 미국(29억 달러), 프랑스(12억 달러), 조세회피(Tax Haven)지역인 케이만군도(11억 달러) 등이다. 조세회피 지역으로부터 유입된 외국인 투자는 주로 통신 및 전력분야에 집중되고 있으며, 기타 외국인 투자는 제약, 기술, 금융, 통상, 인터넷 분야 등으로 다양하다. 2000년 5월 투자 유입금액은 1997년 5월 이후 최고치인 17억 달러로 이중 약 3억 달러는 상파울로 지역 가스사업권 매각 등 민영화 자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2000년 6월중에도 약 12억 달러의 FDI가 유입되는 등 외국인 투자 유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2000년 7월까지 12개월간 외국인 투자 금액은 316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00년 1 7월 현재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은 146억 달러에 달했다. 브라질 정부는 2000년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목표를 220억 달러로 설정했으나 현 추세로 외국인 투자가 유입될 경우 2000년 총 외국인 투자는 26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7) 교역

중남미 무역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브라질의 무역규모도 개방화 추진 이후 매년 크게 확대되어 1995년 무역규모는 962억 달러를 기록하여 5년 전인 1990년에 비해 약 2배 증가하였다. 수출은 정부의 수출 드라이브정책, 남미 공동 시장내 교역 증가 등에 힘입어 1990 95년 중 연평균 8%씩 증가, 1995년에는 465억 달러에 달하였다. 수입은 수입자유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대폭적인 수입관세 인하와 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1990년대 기간 중 연평균 25%씩 늘어나 1995년에는 497억 달러를 기록하

였다. 수출입 추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점은 1995년에 수입이 전년비 49.7% 증가한 반면 수출은 불과 6.8% 증가한데 머물러 1980년대 이후 처음으로 무역수지가 32억 달러의 적자를 나타낸 점이다. 매년 100억 달러 이상의 전통적인 무역흑자국이던 브라질의 무역수지가 이처럼 적자로 반전된 것은 수입개방 때문이다.

8) 경제환경 변화 전망

2001년에도 브라질 경제는 2000년에 이룩한 경제안정기조위에 금리인하에 따른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 구매력 회복에 따른 소비수요증가와 물가안정 등에 힘입어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2002년 선거를 겨냥한 정치세력간의 이합 집산 등 정치적 환경이 경제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또 다른 불안요인으로는 경제성장으로 그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전력부족 현상이 지목되고 있다.

2001년 브라질 경제는 몇몇 국내경제 및 정치분야에서의 개혁이행 여부가 관건으로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진행중인 재정수지 개혁정책이 성공적으로 유지될 경우, 환율과 물가안정의 기조하에 4%의 경제성장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 아르헨티나

1) 경제성장률

1980년대 최악의 경제위기를 경험한 아르헨티나는 1989년 -6.2%에서

1991-94년간에는 연평균 6.9%의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는 등 1990년대 초반에 고성장과 물가안정을 동시에 실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르헨티나는 1995년 멕시코 폐소화 위기의 영향을 받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여 성장세가 크게 꺾임으로써 중남미 최대의 희생자가 되었으나 1996년에는 다시 5.5%의 성장을 달성한데 이어 1997년에도 이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표 3-3> 아르헨티나 거시경제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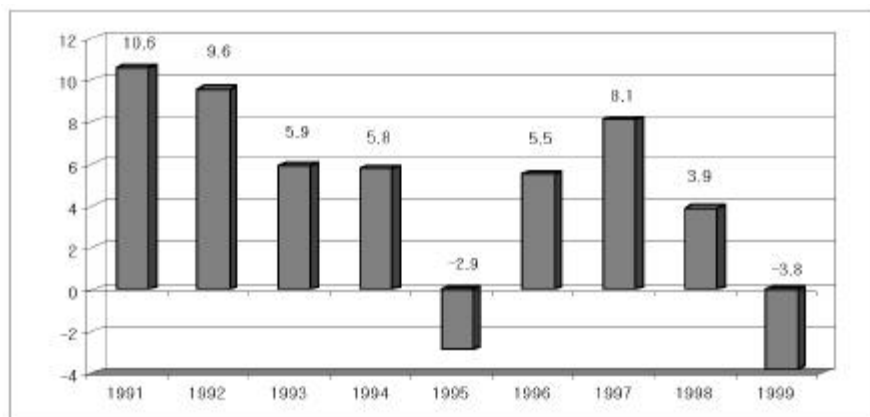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f
경제성장률	5.5	8.1	3.9	-3.8	2.4
재정수지/GDP	-1.9	-1.5	-1.4	-2.4	-1.5
소비자물가상승률	0.2	0.5	0.7	-1.2	0.5

자료: CEPAL; 외교통상부

<그림 3-3> 아르헨티나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1998년도 아르헨티나 경제는 생산활동이 점차 둔화되었으나 연간 GDP는 약 4%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교역조건의 악화 및 대외요소 지급 형태의 지출 증가로 국민소득 증가율은 3%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투자가 총지출의 주요한 구성요소였으며 고정자본형성이 GDP의 약 25%에 달했다. 수출 물량이 위축되는 징후가 나타났으며 GDP성장률(계절조정치)은 상반기보다 하락하였다. 1998년도 연평균 실업률은 약 13%,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인 0.9%를 기록하였다.

1999년도 아르헨티나 경제는 브라질 금융위기, 수출상품의 가격하락, 긴축 재정정책 및 내수 부진, 브라질과의 통상마찰 등으로 극심한 침체를 나타내었다. 또한 금리 상승 및 내수 부진에 따른 기업의 신규투자 위축, 자동차, 철강, 직물, 식품 등 주요산업의 매출 감소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1998년 4/4분기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기록하여 1998년의 3.9% 성장에서 1999년에는 -3.8%로 반전되었다.

그러나 현재 세계경제는 성장세가 확장되고 있는 바, 2000년 경제성장률은 1999년 수준에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브라질의 경제회복, 수출상품의 가격상승 및 투자 확대 등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0년 경제성장률은 1/4분기에는 0.5%, 2/4분기에는 0.8%에 불과하여 연초의 예상과는 달리 1% 미만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1999년 경제성장률 -3.8%와 비교해서 다소 나아진 수치이지만 연초의 기대 4%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이는 개도국 전체 경제성장률 전망치 5.6%와 중남미 전체 경제성장률 4.3%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에콰도르를 제외하고는 중남미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이다.

2) 물가

1989년 4,923%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인플레이션을 기록했던 아르헨티나의 물가도 안정되기 시작하여 1994년과 1995년에는 2~4%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다. 이는 아르헨티나 정부의 물가안정화 정책이 주효한데 따른 것으로 동 정책은 수입 확대 등을 통한 적극적인 공급 확대와 정부 스스로의 재정적자 축소 등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금 동결, 긴축 통화정책 등 소극적인 물가안정화 정책에만 의존하던 과거 정부와는 뚜렷이 구별되고 있다.

3) 교역

개방정책으로 전환된 1990년대 이후 교역규모가 크게 확대되어 아르헨티나의 총 교역규모는 1990년 164억 달러에서 5년 후인 1995년에는 395억 달러로 약 2.4배 확대되었다. 수출은 농산물 및 천연자원 수출 확대에 힘입어 1993년 131억 달러에서 1995년 209억 달러로 급증하였다. 1994년 201억 달러에 달했던 아르헨티나의 수입은 무역수지 악화를 이유로 수입규제가 실시됨에 따라 1995년 186억 달러로 감소되었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의 무역수지는 1994년 58억 달러의 적자에서 1995년에는 23억 달러의 흑자로 반전되었으며 이러한 무역수지 흑자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1997, 1998, 1999년도에는 무역수지가 악화되었다.

특히 브라질의 헤알화 평가절하의 여파로 아르헨티나 총 수출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MERCOSUR에 대한 수출이 크게 감소하여 상품수지가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내수침체에 따른 급속한 수입감소로 오히려 1998년 보다 개선되어 1998년의 30억 달러의 적자에서 1999년에는

16억 달러로 감소되었다(한국수출입은행, 2000). 또한 경상수지는 운송 및 해외여행 감소에 따른 서비스수지 적자 감축에도 불구하고, 외채이자 상환부담 증가로 109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3년 연속 대외 무역조건 악화 및 외채 등 대외요소 지급에 대한 지출 증가가 국민 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수입감소로 무역적자가 축소되었으나 국채이자 지불액이 증가하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4.5%에 이르렀다.

최대 교역상대국인 브라질의 헤알화 평가절하는 아르헨티나 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수출증가의 걸림돌로 작용했고, 아르헨티나 소재 다국적기업들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생산비용이 저렴해진 브라질로 생산 설비를 옮기도록 함으로써 산업공동화 현상을 초래하였다.

4) 투자

개방정책 실시 이후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는 아르헨티나 정부의 노력, 민영화기업 매입, 해외도파 자산 역유입, 남미공동시장에 의한 투자 매력 증가로 외국인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투자 부문은 금융 및 보험, 자동차, 전력, 식품가공 등이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실업률은 1999년 14.3%에서 2000년 5월에는 15.4%로 증가하였다. 실업증가와 임금삭감 등으로 실질 국민소득이 줄어들면서 델라루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연립정부 내에서도 경기부양을 위해 긴축 재정정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폐소화의 평가절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외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아르헨티나는 긴축 재정정책을 완화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 저하로 외자조달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여 긴축 재정정책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아르헨티나는 외채원금 상환과

경상적자 및 재정적자의 보전을 위해 매년 250억 달러 가량의 외자를 조달해야 하는 형편이다. 1999년에도 아르헨티나는 경상수지 적자(121억 달러) 보전과 기일도래 외채 원금(125억 달러) 상환을 위해 총 246억 달러의 외자조달이 필요했으며, 이를 신규 차입 181억 달러와 직접투자 유입액 78억 달러 등으로 보전한 바 있다. 또한, IMF도 아르헨티나의 긴축 재정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아르헨티나가 장기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정개혁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 현재의 긴축정책을 고수하고 노동·사회보장 부문 등의 개혁정책 추진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5) 재정

아르헨티나 정부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자 이의 극복을 위해 IMF와 경제운영 방안에 재합의하는 한편 재정적자 개선을 위한 재정균형화법을 제정하였고, IMF와 합의한 1999년 재정수지 적자 목표(29억 5,000만 달러, GDP대비 0.8%)를 1999년 4월에 49억 5,000만 달러로 확대하였으며, 5월에는 추가적으로 51억 달러(GDP대비 1.5%)로 상향조정하였으나 실제로는 57억 달러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다.

아르헨티나는 2000년 3월 IMF와 72억 달러의 대기성차관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협약에 따라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세율 인상, 정부예산 삭감 등 긴축 재정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기업의 신규투자 축소와 가계의 소비감소를 가져와 경기침체를 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연초부터 이어진 미국의 금리인상과 이로 인한 달러화 강세 기조가 아르헨티나의 고금리로 이어져 경제활동을 위축

시키는 작용을 하였던 바, 이는 통화위원회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아르헨티나 경제가 미국 금리변동의 영향을 직접 받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외 신인도가 향상되었지만 강력한 긴축정책이 없이는 재정균형을 이룰 수 없으며, 민영화 이전 공공부문의 재정적자가 GDP의 2%를 상회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재정적자 축소가 2000년 경제정책의 중점과제로 부상하였다.

6) 환율

중남미 경제가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의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주된 원인으로는 긴축 재정정책으로 인한 내수 및 투자 부진과, 통화위원회 제도(Currency Board System) 시행으로 인한 페소화의 고 평가가 지적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정세불안 및 경기회복 지연으로 2001년 아르헨티나의 외채상환 능력에 대한 국제금융시장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걸쳐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아르헨티나는 1991년 태환정책 실시 이후 비공식적 달러화가 진행되면서 아르헨티나 기업의 달러화 표시 채무비중이 높아진 상황에서 페소화의 평가절하는 기업의 연쇄도산으로 이어질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1999년 1월 메넴 前대통령은 오히려 페소화를 폐지하고 미달러화를 유일한 법정통화로 사용하는 공식적 달러화 정책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하였으나, 현시점에서 아르헨티나의 환율체제 변동 가능성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는 태환정책 실시 이후 물가안정과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페소화의 평가절하 가능성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와는 달리 아르헨티나 정책당국의 페소화 가치 안정에 대한 의지는 매우 확고하다고

할 수 있다.

7) 경제환경 변화 전망

폐소화 가치의 안정이 가져온 물가안정은 거시경제정책 수단의 제한과 수출경쟁력 약화라는 비용을 수반하고 있다. 폐소화의 발행을 달러화 유입액과 연동하고 있는 통화위원회 제도의 시행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적 통화정책을 사용할 여지가 좁아졌고, 확대 재정정책의 시행도 IMF의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세율인상 및 예산삭감 등의 긴축 재정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나, 2000년 재정적자 억제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조세회피 방지와 새로운 세수기반 확충보다는 세율인상에 중점을 둔 세수확대 조치가 오히려 경기위축을 가져오면서 세수도 늘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0년 9월 아르헨티나 정부와 IMF는 2000년 중앙정부의 재정적자 억제목표를 당초 47억 달러에서 53억 달러(GDP의 1.8%)로 수정하기로 합의하였다. 2001년 재정적자 억제목표도 종전 28억 달러에서 41억 달러로 수정하였으나, 2003년까지 균형재정을 이룩한다는 목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아르헨티나의 2001년 정부 예산안도 긴축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2001년도 정부 예산안은 경제가 4.5% 성장할 것을 가정하여 작성되었으며, 중앙정부의 경상지출 예산 7억 달러를 축소하였으나, 이자 지급액 증가로 전체로는 2000년 대비 20억 달러가 늘어난 500억 달러 수준으로 편성되었다. 공공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액은 111억 달러로 전체 예산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정적자는 IMF와의 합의대로 41억 달러를 한도로 설정했다. 그러나 2000년 10월 초 개각에 이은 알바레스 부통령의 사

임 등 연립정부의 분열 등으로 2001년 긴축 예산안의 국회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경제는 1995년 멕시코 페소화 위기 이후 페소화 은행예금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과거와 같은 자본도피 현상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개혁을 통한 금융시스템의 강화로 금융위기의 가능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요 수출품의 국제시세 하락, 최대 교역상대국인 브라질의 평가절하 등 교역조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2000년 수출은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상수지 적자폭도 감소추세를 보이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00년 11월 통신시장이 전면 개방될 경우 통신요금의 인하와 향후 3년간 약 50억 달러의 신규 투자가 기대되고 있어 경제 활성화와 신규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 파라과이

파라과이는 남미대륙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인구의 96%가 스페인 및 과라니 인디언 혼혈로 이루어진 1인당 GDP 1,458달러의 저소득 국가이다. 파라과이는 전통적인 농업중심의 경제구조 속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 경제대국들에 대하여 50%가 넘는 높은 경제의존도를 보여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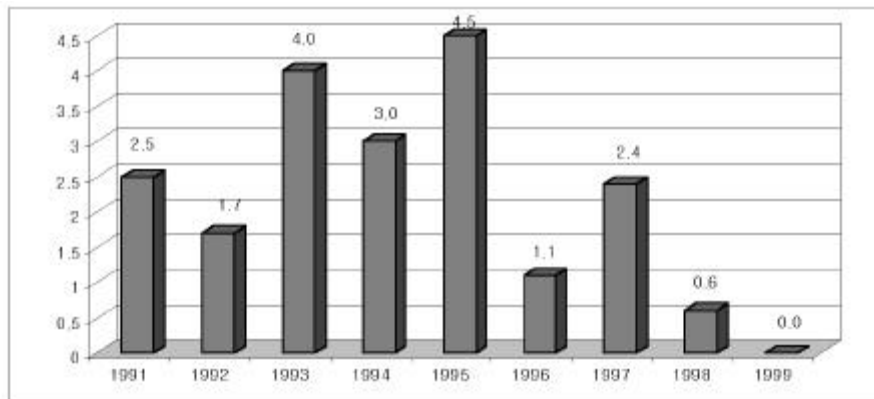
파라과이는 전통적인 1차 산업 위주의 농업국으로서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기후조건에 따른 농산물 작황과 국제시세에 크게 영향을 받는 등 산업구조는 취약한 편이며 농업, 목축업, 임업 등이 GDP의 27%, 총 수출의 64%, 총 고용인구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은 중소기업의 농축산물 가공업, 내수경공업 위주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14%)이 낮다.

1) 경제성장률

1995년 1월 역내자유무역, 대외공동관세 등을 표방한 MERCOSUR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정부의 지속적인 국경 무역 견제, 최근 수년간 계속된 기상이변에 따른 농산물 작황 부진,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국제곡물가 하락 등으로 인하여 최근 경제상황이 악화되었다.

<그림 3-4> 파라과이의 GDP 성장률 추이

(단위: %)



1999년 경제성장률은 1998년의 0.6%에 비하여 더욱 악화된 0.0%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임금인상과 과라니(Guarani)화의 지속적인 평가절하로 최근 3년간 연속 14%대를 유지했다.

2) 교역

파라과이 무역수지는 경제의존도가 높은 브라질의 계속되는 경제침체

영향에 따른 내수시장 침체, 아시아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국제 곡물가 하락, 과라니화의 평가절하로 인한 수입둔화 등으로 수출입 물량이 감소하여 1998년의 9억 달러의 적자에서 1999년에는 6억 달러로 다소 개선되었다. 특히 1999년 1월 브라질 외환위기에 따른 헤알화의 대폭적인 평가절하는 값싼 브라질 제품을 파라과이에 역류시켜, 1990년대 중반까지 파라과이 경제에 중요한 외화 공급원이었던 국경무역을 유명무실한 상태로 만들고 있다.

1998-99년중 엘니뇨로 인한 농산물 작황부진, 브라질의 외환위기, 금융기관 부실화에 따른 자금경색 등으로 2년 연속 경기침체를 기록하였으나, 2000년에는 주요 수출품인 면화와 대두의 국제가격 상승, 브라질의 경기회복, 타이완 본드 발행에 따른 자금경색 완화 등으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2000년 전체로는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수출입은행, 2000). 무역수지와 경상수지가 다소 개선되었으나 적자규모가 지속되고 있으며, 수출감소 보다 더 큰 수입감소로 상품수지 적자규모는 2년 연속 감소하였으나, 2000년에는 내수회복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1998년 1억 1,400만 달러 → 1999년 9,900만 달러 → 2000년 2억 3,000만 달러). 1999년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GDP의 2.3%인 1억 7,800만 달러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었으나 2000년에는 同 3.7%인 2억 9,900만 달러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3) 경제환경 변화 전망

1989년 로드리게스(Rodrigues) 정권 이후 민간 주도형 경제자유화 정책을 시행하여 국영기업 민영화, 재정적자 축소, 조세제도 및 농업부문 개혁, 낙후된 금융부분의 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영화의 경우 여당

내 반대세력으로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 파라과이의 외채구조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며, 1999년 말 현재 총 외채규모는 GDP의 34.1%인 26억 달러, 1999년 말 현재 대외지급준비자산은 10억 달러로 수입의 3.2개월 분이다.

2000년 들어 브라질 외환위기의 진정과 타이완 본드 발행으로 신용경색이 완화되어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정정불안과 금융위기상황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등이 위험요소로 잠재해 있다.

국내외 변수들이 2000-2001년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 농업부문의 성장이 기대되며, MERCOSUR 회원국들의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역내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파라과이 수출물량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두와 면화 등 농산물의 국제가격향상은 경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라. 우루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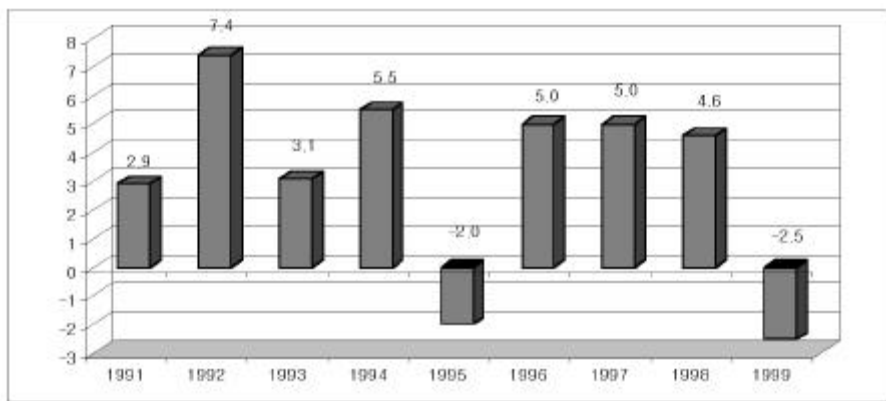
우루과이는 최대 경제대국들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양국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관계로 금융, 유통 등 서비스업이 발달한 나라이다. 농수산물과 원자재 수출에 의존도가 높은 우루과이는 세계적인 경기 회복으로 인하여 2000년에는 1999년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MERCOSUR 경제도 재정적자 문제, 환율안정 등 내부의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현안사항들이 산적해 있으나 1999년보다는 다소 양호한 외부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MERCOSUR의 회원국인 우루과이도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1) 경제성장률

1996~97년간 GDP는 5%대의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1998년 1/4분기에도 거의 7% 성장하였으나 이후 경기 냉각으로 1998년 전체 성장률은 5%를 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경기후퇴 및 긴축 재정정책의 시행으로 인플레이션은 30년만의 최저인 9%대를 기록하였다. 우루과이는 1999년 1월 브라질 헤알(Real)화의 평가절하 및 자국 내수침체에 따른 수요둔화, 교역량 급감, 국제원자재 가격의 하락 등으로 인해 1999년 한해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었다.

<그림 3-5> 우루과이의 GDP 성장률 추이

(단위: %)



2) 투자, 소비자 물가 및 재정과 환율 동향

1999년 말 대선 결과에 따라 2000년 3월 1일자로 출범한 신정부는 '경제성장과 실업률 해소' 차원에서 내수진작 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1%에 이른 실업률을 낮추는데 노력하고 있다. 환율문제에 있어서도 급격한 환율변경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다소 신축적인 환율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중도좌파연합이 제1야당으로 부상함에 따라 현 정부는 '합의에 의한 정부 운영'이 불가피하며, 환율정책도 기존의 경직된 시스템에서 다소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 밖의 기존 자유무역 정책은 집권여당의 정권 재창출 성공으로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목할 점은 1999년 대선 결과 제3당이었던 중도좌파연합이 제1야당으로 부상함으로써 실업률 해소 차원에서 공공지출 증대 및 유연한 환율정책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정부는 우루과이 경제안정 정책유지 범위 내에서 점진적 평가절하정책 도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신정부가 구상중인 부가가치세 인하, 세제개혁 등이 이루어진다면 기업들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우루과이 내 수시장도 다소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신정부의 환율정책 변경으로 인하여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는 소비자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다. 재정적자 문제도 신정부가 경기부양책을 추진할 예정임에 따라 그 적자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웃 국가인 아르헨티나 경제가 델라루아 신정부가 의도한 것과는 달리 국제적 신임을 회복치 못하고 경기침체가 지속된다면 우루과이도 관광수지, 대외교역 등에 영향을 받아 경제성장을 낙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3) 교역

2000년 우루과이의 교역여건은 전년에 비하여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

1999년 1월 브라질 외환위기로 야기된 헤알화 평가절하로 우루과이는 1990년대 들어서 최대의 불경기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브라질 경제가 1999년 하반기부터 회복국면으로 접어들며 브라질 내수시장이 살아나고 있고, 이에 따라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루과이 경제도 외부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수출입증가 등 교역량 증가가 예상된다.

한편, 우루과이는 2000년 1월 1일부터 대부분의 MERCOSUR 회원국 생산품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역외국 수출업체는 가격경쟁력 면에서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MERCOSUR 공동시장의 관세 인하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2000년부터 대부분 역내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고, 소비자들도 역내 제품들에 대한 심리적 선호도도 가세해 역외 제품들이 이들 역내 제품들과 경쟁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4) 경제환경 변화 전망

신정부는 물가안정, 공공부문 투자확대 및 부가가치세 인하 등 세계개혁과 같은 공공부문 개혁을 통하여 경기 회복에 힘쓰고 있다. 특히 경기부양책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가 다소 확대되더라도 경제회복을 위해 이를 감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되살아나고 경기가 회복국면에 접어들면 대부분 품목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루과이로서는 MERCOSUR 회원국과 제3국과의 교역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의 경제가 점차 회복됨에 따라 남미 최대의 무역항인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 자유무역항이나 콜로니아 자유무역지대 등을 통한 제3국 수출용 수입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대부분의 남미 수출품은 우루과이의 발달된 물류시스템을 활용, 일

단 우루과이로 수입된 후 제3국으로 수출되어 왔다. 또한 MERCOSUR 활성화에 따른 지역 인프라 개선으로 우루과이를 통한 국제무역도 점진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3. MERCOSUR의 경제성과에 대한 평가

가. 교역 증대

대외공동관세의 적용이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MERCOSUR의 대외 보호무역조치가 크게 축소되어 왔다. 최혜국(MFN: Most Favored Nation) 대우 단순 평균 관세는 1986년 41%에서 10년 뒤인 1996년에 12%로 인하되었으며, 이에 힘입어 1990-97년 사이 교역량이 급속히 확대되었다. 총수출은 1990년에 465억 달러에서 1997년에는 836억 달러로 연평균 8.7% 증가하였다. 총수입도 1990-97년 사이 316억 달러에서 1,057억 달러로 연평균 18.8%나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8년에는 국제외환위기 발생으로 총수출, 총수입이 각각 전년대비 2.6%, 2.2% 감소하였으며 1999년에도 역내 경기침체로 총수출이 14% 감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역내관세 철폐로 역내교역량은 더욱 확대되어 1990-97년 사이 역내 수출은 41억 달러에서 207억 달러로 연평균 26%나 증가하였고 역내수입도 45억 달러에서 216억 달러로 연평균 25.2%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8년에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경기침체로 역내 교역량이 1991년 이래 처음으로 2% 감소하였으며 1999년에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간 무역분쟁으로 역내수출이 크게 위축되어 전년대비 32%나 감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총 수출에서 역내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에 8.9%에서

1998년에는 25.1%로 크게 증가하였고, 총수입에서 역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도 1990년 14.1%에서 1998년 21.4%로 커졌다. 이는 각 회원국간의 상호의존성이 매우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MERCOSUR가 각 회원국의 중요한 수출시장이자 수입상대국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브라질은 MERCOSUR내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상대국으로서 아르헨티나 수출의 약 1/3, 파라과이 수출의 약 40%, 우루과이 수출의 약 35%를 차지하였다.

MERCOSUR의 여타 교역상대국과의 교역비중 추이를 보면 MERCOSUR의 여타 중남미 국가로의 수출비중은 1990년 8%에서 1998년 11%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반면에 여타 지역과의 교역비중은 축소되었는데 특히 對 EU 수출비중은 1990년 32%에서 1998년 22%로 크게 줄어들었다. 수입추이를 보면 MERCOSUR의 여타 중남미 국가로부터의 수입비중은 1990년 7%에서 1998년에 5%로 다소 축소된 반면 미국, 캐나다, EU 등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은 소폭 증가하였다.

나. 공동시장 형성을 위한 추가 조치

MERCOSUR 회원국들은 역내관세와 비관세장벽 철폐를 통해 역내 무역 자유화가 크게 활성화되었지만 자국 산업보호와 국제수지악화 방지를 위해 MERCOSUR 규정에 위배되는 보호 무역조치를 채택하여 무역을 제한하여 왔다. 이와 같이 역내 상품교역과 관련하여 일부 어려움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MERCOSUR 회원국들의 상호의존도가 심화됨에 따라 경제통합과 관련된 여러 부문에서 다소의 진전을 이루었는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서비스교역에 대한 제한조치 단계적 제거

1997년 12월 회원국들은 2007년까지 서비스 교역에 대한 제한조치를 단계적으로 제거해 나가기로 합의한 몬테비데오 의정서(Protocol of Services)에 서명하였다. 이에 따라 공식협상이 1998년 하반기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금융서비스, 항공운송, 위성통신, 보험 및 전문직 서비스 등과 같은 특수한 부문에서는 자유화가 조기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2) 공공조달 정책에 대한 공동접근

OECD가 추진하고 있는 것과 발맞추어 공공조달 정책에 대한 공동접근 방법을 도출해 내기 위한 특별그룹이 설립되었다.

3) 역내 노동이동

1997년 MERCOSUR 단일여권 도입 제안은 중기적으로 공동시장 형성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역내의 노동이동은 아직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현재 협상중인 전문직 서비스의 이동자유화는 서비스 부문에서의 중요한 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4) 취득학위 상호인정

대학학위의 상호인정에 관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가 1998년 서명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同 양해각서에 따르면 준회원국인 칠레와 볼리비아를 포함한 모든 회원국은 회원국내에 소재한 대학에서 취

득한 학위를 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합의가 전면적으로 이행될 경우 역내 대학 졸업생들은 역내 6개국 중 어느 나라에서도 취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일부 직종에 대해서 대학졸업수준 전문직의 자격요건에 대한 양자협상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다음 조치는 국가기관의 기존 관행에 기초하여 역내 대학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공동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5) 노동자 권리 선언

1998년 12월에 개최된 제15차 공동시장이사회(CMC)에서 회원국들은 노동자권리선언(Declaration of Workers Rights)에 서명하였다. 同 선언은 MERCOSUR 역내에서 노동자의 개인적, 집단적 권리의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블록 내에서의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제도적 차원에서의 진전은 완만하지만, 최근 자동차산업에서 중요한 발전이 이루어졌다. 브라질의 Volkswagen社는 브라질의 노동조합(CUT: Central Uniao dos Trabalhadores) 및 아르헨티나의 자동차 노동조합(SMATA: Sindicato de Mecanicos y Afines del Transporte Automotor de Argentina)과 협정을 체결하였다. 同 협정은 同社의 MERCOSUR 역내 7개 공장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노동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연차회의를 개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6) 예술작품의 관세 면세

1997년 12월에 승인된 'Cultural Seal'은 4개 회원국간에 예술작품과 기타 문화 서비스 및 상품의 운송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同 Seal

을 부여받은 예술작품들은 세관에서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며 대신 전시 장소에서 검사가 행해진다. 또한 일시적 전시를 위해 예술작품을 타 회원국으로 운송할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할 것을 논의 중에 있다.

다. 정책 공조

MERCOSUR 회원국들은 공동무역정책에 관한 작업을 계속하여 왔고, 1998년 중반에 공동시장그룹(CMG)은 공동 반덤핑 법률을 개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후 법률안이 준비되어 현재 평가 중에 있다.

1999년 MERCOSUR의 경제적 어려움을 계기로 역내 정책조정과 문제 해결에 대한 보다 공식적인 접근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대응하여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대통령은 1999년 초 헤알화의 평가절하가 양국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키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국 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공동의 조치를 취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거시경제 조정위원회(Macroeconomic Coordination Committee), 무역조정위원회(Trade Coordination Committee) 등 2개의 새로운 위원회가 1999년 6월 설립되었다. 먼저 거시경제 조정위원회는 회원국들의 경제정책을 검토하고 거시경제조정을 위한 새로운 제안을 개발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또한 同 위원회는 거시경제조정을 위한 첫 단계로 회원국들이 발표하는 통계의 산출기준을 일치시키는 방법을 검토하는 임무를 맡았다. 다음으로 무역조정위원회는 평가절하가 역내 및 역외의 무역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또한 MERCOSUR 정상들은 EU의 마스트리히트조약(Maastricht Treaty)과 같은 재정균형관련조약(Small Maastricht Treaty) 체결을 통해 장기적으로 역내 단일 통화를 창설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공공

지출을 엄격히 제한하여 재정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재정 책임법(Fiscal Responsibility Laws)이 현재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의회에서 검토되고 있다. 단일 통화추진과 관련하여 브라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이의 조기추진에는 소극적인 반면 아르헨티나는 매우 적극적이어서 상당한 입장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경제정책 조정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최근의 무역불균형이 회원국들간의 현저한 거시경제의 차이 및 정책대응의 속도와 범위의 차이에 기인되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긍정적인 진전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심각한 경제불안정을 겪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양국은 서로 다른 시기에 안정화 노력을 추진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먼저 아르헨티나는 1991년에 태환법(Convertibility Law)을 제정하여 1990년대 초 급속한 물가안정 및 경제회복을 이룩할 수 있었다. 브라질은 1994년에 새 화폐인 헤알화를 미국 달러화에 연동시키는 'Real Plan'을 도입하여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경제성장을 회복하였다. 그러나 1997년 말 아시아 금융위기와 1998년 중반의 러시아 경제위기에 의해 브라질 금융이 타격을 입었고 국제수지가 심각한 압력을 받아 이로 인해 1999년 초에 브라질은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정책의 방향을 수정하였다.

환율제도의 차이가 MERCOSUR가 최근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환율문제를 다루는 데에는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 먼저 통화접근법(Monetary Approach)은 경제통합의 초기단계에 단일 통화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단일 통화는 회원국간의 환율의 급격한 움직임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을 제거하기 때문에 통합과정의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반해 구조적 접근법(Structural Approach)은 EU에서 이미 채택, 시행하고 있는 접근법으로서, 단일통화는 장기간의 거시경제 조정이 이루어진 후인 통합과정의 마지막에 도입되어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후자의 구조적 접근법이 MERCOSUR내에서 최근 수개월간 우세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정, 통화, 환율정책의 조정을 위한 첫 단계로 경제 통계의 일치를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라. 산업통합

MERCOSUR는 처음부터 국가별, 산업별 보완관계 증진을 위한 물리적 통합을 촉진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은 MERCOSUR 회원국간의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증대됨에 따라 국가별 에너지 및 운송 관련 사회간접자본의 지역적 네트워크구축 등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추진되고 있다.

1) 에너지부문

에너지부문은 MERCOSUR에 의해 확대된 시장을 구축할 수 있는 최초의 부문이다. 즉 에너지 이동에 대한 규제가 철폐됨으로써 천연가스, 전기, 석유산업 등의 공공 및 민간기업들은 보다 넓은 역내시장으로 영업활동을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의 변화속도가 지속된다면 향후 10년 이내에 고도로 통합된 역내 에너지시장이 출현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간 천연가스개발에는 1997-99년 사이에 약 60억 달러가 투자되었으며, 주요 사업에는 볼리비아의 산타크루스(Santa Cruz)와 브라질의 상파울루(Sao Paulo)를 연결하는 총 3,150km의 가스 파이프라인 설치사업, 아르헨티나의 멘도사(Mendoza)와 칠레의 산티아고(Santiago)를 연결하는 총 465km의 가스 파이프라인 설치사업,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와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Montevideo)를 연결하는 총 220km

의 가스 파이프라인 설치사업 및 최근에 착공된 아르헨티나의 후후이(Jujuy)와 칠레 북부의 주요 항구인 태평양 연안의 메히요네스(Mejillones)를 잇는 총 411km의 가스 파이프라인 설치사업 등이 있다. 또한 영국의 British Gas사는 향후 2년간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을 위해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볼리비아 등에 50억 파운드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다음으로 전력부문에서는 1998년에 ‘MERCOSUR의 전력교환 및 통합에 관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of Electricity Exchange and Integration in MERCOSUR)’가 체결되었다. 同 각서는 국경전기 통합과 전력판매업자에 의한 전력공급원의 자유로운 계약체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동 협정은 또한 전력의 상호연결을 위한 건설 및 운영에 참여하는 공공 및 민간 기업에 대한 인가, 허가 및 양허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석유회사들은 인수·합병 또는 탐사, 생산 및 판매 등에서의 합작투자를 통해 급속히 역내의 영업활동을 통합하고 있다. 브라질의 Petrobras, 아르헨티나의 YPF, 베네수엘라의 Petroven 사이에 체결된 석유 생산 및 판매에 관한 협정은 이러한 추세를 나타내는 사례이며, 1998년 Petrobras와 YPF는 양사가 상대국에 주유소 개설을 허용하는데 합의하였다.

2) 운송망

역내 운송망 연결은 기존 각 회원국의 인프라를 기초로 하여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역내의 주요 운송형태인 고속도로는 대서양 연안의 브라질, 우루과이 및 아르헨티나의 주요 도시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기존 ‘MERCOSUR Transport Corridor’를 대폭 개선하고 플라타강에 새로운 교량을 건설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남미의 동부 및 중부의 공업 및 부유한 농업지역의 수출업자들이 태평양 연안의 항구를 보다 빨리 이용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어 이에 북부의 볼리비아와 남부의 아르헨티나를 경유하여 칠레와 페루의 무역항까지 연결하는 대양간 Corridor의 개발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철도의 상호연결과 2개의 주요 내륙수로(Paraguay-Parana 및 Tiete-Parana)의 개선으로 곡물, 광물 및 비료의 복합운송체제가 개발되고 있다. 한편 Paraguay-Parana 수로의 개발은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다소의 문제도 안고 있다. 同 수로는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및 우루과이의 중서부지역을 연결하는 자연운하로 형성되어 있는데, 문제는 건기에 대형 바지선이 강 상류로 항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강을 준설하는데 따른 환경파괴와 비용문제가 同 프로젝트의 전면적인 시행에 대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최근에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현재의 역내 운송체제에 심각한 병목현상이 상존하고 있어 대규모의 역내 교역 물량이 원활히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IV. 남미공동시장(MERCOSUR) 구축에 따른 새로운 통상 및 경제환경

1. 세계 시장 통합과 지역무역협정의 강화

세계시장의 통합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정보통신기술 및 교통의 발달, 세계화 인식의 확산 등이 경제국경의 개념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국가간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장벽이 급속히 허물어진다고 할 수 있다.

세계 경제의 지역주의(Regionalism)화가 심화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간에는 1998년 말 현재 약 140개의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최근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은 범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선진국과 개도국간 지역무역협정의 경우 예외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이해를 같이하는 교역 상대국과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여 경제유대관계를 강화해 나아가고 있다. 선진국들은 세계 교역과 투자의 자유화에 목표를 두고 다자간, 쌍무간 무역협정을 체결해 왔으며, 인접 소수 국가와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해 왔다. 이와 같이 선진국들의 지역무역협정 체결이 증가하자 개도국들도 인접 국가나 선진국과의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개도국들은 인접 개도국들과의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확대해 왔으나, 수출증대를 위해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과의 지역무역협정체결을 모색하고 있다.

2. 중남미지역의 자유무역협정

중남미 국가들은 1960년대부터 자국의 안정적 성장기반 구축 및 수출 시장 확보를 위해 인근국가끼리 뭉치는 소지역 단위의 경제통합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각국에 산적해 있는 정치·경제 문제, 상호 보완성을 저하시키는 유사한 산업구조, 여기에 지리·지형적 장애요인까지 겹쳐 경제통합 노력은 더 이상의 발전을 이룩하지 못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 세계 각국의 경제블록화가 거세어지고, 1991년 남미 공동시장(MERCOSUR) 출범,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체결됨으로써 미주 대륙의 경제통합 움직임이 다시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자극을 받은 중남미 각국들은 경제통합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북미 및 중남미 대륙을 하나의 경제통합체로 발전시키기 위한 협상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각 국가간의 상호이해 충돌 및 협상 주도권 경쟁, 미국 행정부의 의회로부터의 신속승인권(Fast-Track Negotiating Authority) 획득 지연 등에 따라 협상이 지연되어 왔다. 마침내 1998년 4월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제2회 미주정상회담에서 2005년까지 미주 자유무역지대(FTAA: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를 창설키로 합의하였다. 또한 남미경제의 주축인 브라질은 FTAA 창설에 앞서 남미대륙의 정치·경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 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기 위하여 남미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0년 8월 31일부터 9월1일까지 남미 12개국 정상들은 브라질의 브라질리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2010년까지 남미 국가들을 연합체 형태로 통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각국 정상들은 2002년까지 남미 경제를 하나로 묶는 남미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위한 ‘브라질

리아 공동성명'에 서명하였다. 인구 3억 4,000만 명, 1조 2,000억 달러 규모의 단일 시장인 남미 자유무역지대가 등장할 경우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3. 1990년대 중남미 경제통합의 재활성화

이처럼 중남미 지역 경제 통합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배경에는 우선 1990년대 들어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적 여건이 크게 변화한 것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남미 각국에서 경제안정에 대한 기대효과가 큰 역내 공동시장 형성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즉, 중남미 국가들은 1980년대 후반 이후 내수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일변도의 수입대체산업 육성정책을 과감히 철폐하고 대폭적인 수입개방과 제조, 건설, 통신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왔다. 또한 자구 산업의 체질을 강화함으로써 대외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수출주도산업 육성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작은 규모의 내수시장을 갖고 있는 중남미국가들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각국은 경제통합을 통해 역내국간의 무역창출 효과와 규모의 경제 실현, 안정적 시장확보에 따른 국제무역의 위험부담 감소 효과 등을 기대하게 되었다.

중남미 지역의 경제통합은 1990년대 중남미 경제의 변화 상 가운데 무역자유화 정책의 다른 한 측면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즉 1990년대 중남미 각국들의 수출 지향의 새로운 성장전략의 성공여부는 더 많은 수출시장의 확보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중남미 국가들이 지역경제 통합 노력과 역외지역과의 경제협력에 역점을 두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

었다. 최근에 들어와서 중남미 지역 경제통합은 소 지역통합체 내의 재할성화와 아울러 외적확대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또한 1994년 NAFTA 체결 이후에 남미 또는 카리브권, 더 나아가서는 미주대륙 전체를 포괄하는 경제통합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듯 미주전체를 포괄하는 경제통합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새로운 국제질서 구축을 위한 미국의 對중남미정책의 변화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1990년 6월 부시 前 미국대통령에 의해 발표된 범 미주 자유무역구상(EAI: Enterprise for the Americas Initiative)은 첫째, 중남미, 카리브지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둘째, 중남미국가들의 포괄적인 투자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다자간 투자기금을 창설하며, 셋째,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공적채무 삭감을 통하여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중남미 제국과의 정치·경제관계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미주대륙 전체를 포함하는 FTAA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소규모 역내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중남미 각국의 입장은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범미주 자유무역구상에 대비하여 사전여건을 조성하고 공동시장 결성을 통하여 NAFTA 및 기타 지역경제통합체에 공동 대응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중남미 전체의 경제통합을 촉진함과 동시에 미국과의 자유무역지역 창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MERCOSUR의 확대 가능성

브라질은 1999년 초의 환율 평가절하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전년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수출증대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 안데스공동체와 동년 7월에 무역특혜협정을 체결하였으며, 同 협정은 1999년 8월 16일 발효하여 2년간 유효하며 2,700개의 품목이 특혜관세를 받게된다. 이러한 개별 회원국들의 협정 체결은 2006년까지 관세동맹을 완성하기 위한 대외공동관세의 통일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특히 1998년의 아르헨티나와 멕시코의 무역협정과 브라질과 안데스공동체와의 무역특혜협정체결은 공동체 차원에서 칠레, 볼리비아 및 EU와 성공적으로 체결한 방식인 전체 회원국 모두의 공동된 참여가 없음으로 타 회원국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안데스공동체, 카리브공동시장 등과 비교하면, MERCOSUR 회원국들이 하나의 협력체로 서로 협력해 온 경험은 짧으며, 처음부터 제도적 틀이 여타 협력체보다는 훨씬 덜 포괄적이었다. MERCOSUR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법적인 실체로 발전한 1995년부터 일차적인 초점은 내부적인 통합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데에 주어졌다. 그러나 MERCOSUR 회원국들은 개방적 지역주의에 따라 인접국가들인 칠레와 볼리비아를 준 회원국으로 받아드려 협력체를 확대하였고 EU와도 자유무역지대 형성 추진 합의를 하였으나, 개별 회원국들의 개별 양자협정 등으로 인해 회원국간의 이견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5. 남미 경제통합체 추진 전망

당초 1999년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고 2000년부터 출범기로 한 안데스 공동체(Andean Community; CAN)와 MERCOSUR간의 통합협상이 회원국간의 이견으로 지체되자 브라질 정부는 단독으로 CAN과의 협상을 추진하였다. 본래 양 지역 회원국들은 1998년 4월 양자간의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위한 기본협력협정을 체결, 제1단계로 1999년 3월 31일 까지 특혜 관세협정을 완료하고, 제2단계로 2000년 1월 1일부로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1999년 3월 제1단계 협상완료 시한까지 총 3,500개에 달하는 특혜관세적용대상 품목 중 1,100개 품목에 대해 협상을 완료하였으나, 신흥시장의 금융위기로 각국이 자국산업 보호를 강화하여, 농산물, 석유화학제품, 섬유류, 철강 등 기타분야에서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하였다.

그 결과 브라질 측과 안데스공동체 회원국은 1999년 4월 제1차 회담을 갖고 기존에 합의한 1,100개 특혜관세 대상품목 이외에 275개 품목에 대하여 특혜관세 적용에 합의하고, 이후 2차례의 추가회담을 통해 1999년 7월 특혜관세협정 체결에 최종 합의하여 브라질 까르도조 대통령의 페루 방문시 정식 조인되었으며, 8월 16일부터 발효에 들어갔다. 특혜관세 협정체결로 브라질은 對안데스공동체 수입관세를 평균 70% 인하했으며, 안데스공동체는 對브라질 수입관세를 평균 52% 인하하였다.

브라질의 일방적인 CAN 회원국과의 특혜관세협정 추진은 여타 MERCOSUR 회원국들의 심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으나 MERCOSUR-CAN 간의 자유무역협정체결을 앞당기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가 CAN과의 특혜관세협정을 지연시키고 있는 이유는 CAN회원국들과 일부 품목에서 경쟁관계에 있다고 판단, 이들 국가와의 협정체결로 주 수출시장인 브라질시장에서의 수출시장 기반 상실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브라질이 여타회원국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동 협정을 단독으로 추진한 이유는 해알화 평가절하 이후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CAN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또한 CAN은 MERCOSUR의 주축이 되는 브라질의 방대한 시장으로의

진출을 가속화 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양자간의 상호이해의 공통점을 찾았기 때문이다.

1990년대에 들어와 활발하게 추진되어 온 중남미 지역내 경제통합 움직임은 최근 일련의 신흥시장의 금융위기, 특히 브라질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개별 회원국들의 거시경제 불안정에 따라 대다수의 회원국들이 국내경제문제 해결에 주력함으로써 다소 추진력이 약화되었으며, 각국간의 이해상충에 따라 협상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MERCOSUR의 경우 지금까지 성공적인 통합추진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의 브라질에 대한 보호무역조치로 양국간의 통상마찰이 야기되고 있어 이의 해결이 통합공고화 과정의 선결과제로 대두될 전망이며, CAN의 경우 역내 일부 회원국의 심각한 경기침체에다 회원국들이 역내경제통합보다 최대 교역 대상국인 미국과의 관계강화 전략을 도모함에 따라 통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1999년 4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아르헨티나-브라질 양국간 외무, 경제, 국방장관회담에서 양국간 관계진전에 만족을 표명하고 양국간 발전전략에 있어서의 MERCOSUR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양국간 거시경제지표 조정, 자본시장 통합 추진, 설탕분야의 MERCOSUR 체제 규제화 등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이 회의는 아르헨티나-브라질 양국의 MERCOSUR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MERCOSUR 강화를 위한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1999년 1월 브라질의 해알화 평가 절하 후 담보상태에 머물러 온 MERCOSUR 통합 협상에 진전이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합의는 양국이 거시경제 지표의 공동목표 설정 등을 통해 MERCOSUR 출범이래 처음으로 양국 경제정책의 조율 가능성을 나타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V. 남미공동시장(MERCOSUR)에 대한 과제 및 전망

1. MERCOSUR의 발전과제

이제 보다 광범위한 공동시장 형성을 위한 기초는 마련되었으나 MERCOSUR가 공동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상당히 많은 세부사항이 검토되고 합의되어야 한다. 회원국들간의 많은 이견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양보와 타협을 도출해낼 수 있었던 긍정적인 사태전개와 각 회원국 정상의 굳은 의지에도 불구하고 MERCOSUR의 장래는 아직 낙관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첫째, MERCOSUR의 장래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경제적으로 안정기조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회원국들의 경제 안정과 정치적 안정 없이는 MERCOSUR도 과거 이 지역에서 여러 차례 시도하였던 경제통합의 한 실패 사례로서 기록될 것이며, 효율적 경제운용이 불가능하게 되고 회원국들 간의 경제정책 조율도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MERCOSUR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회원국들 간에 환율의 조정과 관리가 합리적이며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지난 1982년부터 가시화 된 외채문제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경우 매우 심각한 영향을 띄게 되면서 환율정책은 단순한 외환관리 정책으로 전락되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와 같이 경제력 집중현상이 두드러진 나라의 경우 국내산업의 보호와 수출품의 가격경쟁력 보호라는 기치하에 현실적 상황을 무시하며 적용된 환율관리정책은 오히려 산업의 생

산성과 투자의 효율성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으며, 결국 산업의 국제경쟁력 상실을 초래하였다.

정치민주화도 환율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가져왔으며, 특히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기존의 정치적·경제적 질서가 붕괴되고 새로운 질서가 등장하는 과정에서, 새로이 수립된 민주정부의 정치적 경제적 역량에 대하여 국민들은 의구심과 불안의 시선을 보내게 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환율의 변동이 곧 신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이용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경제논리와는 관계없이 국내 정치적 상황에 따라 환율이 관리되어 이 지역경제의 난맥상을 초래하는 원인으로서 작용하였다.

MERCOSUR의 두 주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현재 양국간 환율정책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로 상이한 환율관리에 관한 정책의 조정방안으로서 EMU(European Monetary System) 형태의 구조를 취하는 방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어떠한 방식을 채택하든 회원국들 간에 합리적인 환율정책의 정착 없이 MERCOSUR의 성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셋째, 회원국 내의 정치적 불안정 또한 MERCOSUR의 성공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새로 들어서는 정부나 정치적인 불안이 MERCOSUR에 대한 지지를 심각할 정도로 변경할 가능성은 적지만 약화시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따라서 경제적 여건이 악화되면, MERCOSUR 관련 정책들은 더 긴급한 목표의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상존한다. 원래의 아순시온협약에서 지향하던 목표를 달성하고 주변국가들을 포함하는 광역시장을 형성하려는 MERCOSUR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정치력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 하여줄 민주화의 정착과 강한 정치적 리더십의 확보는 또 하나의 선결조건이다.

넷째, 공동시장 형성에 장애가 되고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은 각 회원국들의 생산구조의 문제이다. 특히 농산물 생산구조를 보면 회원국간에 보완적 관계가 없으며 경쟁적 관계만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갈등과 마찰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MERCOSUR 역내 농업정책의 일원화는 농산물시장 통합을 위한 선결과제이다. 최저가격정책, 정부의 재고유지정책, 금융특혜 등의 방법이 없어지지 않는 한 공동시장이 완성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수단의 철폐는 회원국들의 이해관계가 달라 쉽게 합의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들 정책수단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브라질의 경우 특별 지원금과 소수 농축산품목의 최저가격 유지정책을 가지고 있을 따름이며, 우루과이와 파라과이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농축산물 수출국이면서도 브라질과 비교해 볼 때 정책적 지원과 보호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편이다.

주변국들에 비해 브라질은 다양한 대규모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1억 6,000만 명 인구에 대한 농산물수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수확량의 불안정과 국제 곡물가격의 빈번한 변동은 국내 물가안정에 커다란 애로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MERCOSUR 형성에 따른 최저가격 유지정책의 철폐는 생산과 국내 소비수준에 대해 예측 불허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반면 다른 회원국은 브라질과 같은 정책적 지원을 보장할 수 없이 불공평한 조건에서 경쟁을 하여야 되는 문제가 있다.

다른 여타 산업분야에서는 브라질이 MERCOSUR 회원국들과 비교해 월등한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점이 실질적인 문제로 되고 있다. 지난 20년간 거시경제의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의 몇몇 산업분야는 기술과 품질 면에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였으나, 많은 분야가 정부의 지원과 보호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공동시장형성 후에도 이러한 상

황은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2. MERCOSUR의 발전 전망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주축으로 추진되고 있는 MERCOSUR는 회원국들간에 많은 갈등과 마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아순시온협약에 명시된 MERCOSUR의 목표에는 못 미치지만, 참여한 대립 속에서도 회원국들 간에 절충과 타협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MERCOSUR이 1995년에 출범할 수 있었다는 것은 회원국 정상들이 MERCOSUR 형성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며 각 회원국들이 MERCOSUR에 대해 부여하는 비중과 기대가 막중하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더욱이 남미국가인 칠레와 안데스공동체 회원국인 볼리비아가 준 회원국의 자격으로 MERCOSUR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향후 MERCOSUR와 안데스공동체의 통합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아울러 MERCOSUR의 잠재력을 더 한층 증대시켜 주었다. 아직은 그 가능성이 불투명하지만, MERCOSUR와 안데스공동체와의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어 범 남미자유무역지역이 형성되면, 국제사회에서 MERCOSUR의 비중은 더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MERCOSUR가 업계, 교역상대국 및 외국인 투자자 사이에 대두되었던 우려를 불식시키고 경제통합계획을 다시 정상궤도에 올려, 관세동맹을 공고히 하고 공동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환율문제로서 MERCOSUR의 양대 주축국인 브라질의 헤알화의

자유변동과 아르헨티나의 고정환율제를 조화시키고 환율차이를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아직까지 양국간 MERCOSUR 단일통화에 대한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아르헨티나가 고정환율제를 포기할 가능성은 아직은 희박해 보인다.

둘째, 대외무역에 대한 회원국의 자의적인 규제가 제거되어야 한다. 자유무역지대 및 대외공동관세에 대한 예외조치가 가능한 한 없어져야 한다.

셋째, 무역마찰을 완화시키기 위해 회원국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합의된 공동무역정책들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나아가 거시경제정책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제도적인 무역분쟁 해결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1999년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사이의 무역마찰은 제도적인 무역분쟁 해결절차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투자자들은 남미공동시장(MERCOSUR) 양대 회원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관계악화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MERCOSUR는 역내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진행중에 있다. 최근 MERCOSUR는 거의 붕괴직전에 이른 듯이 보였으며 아르헨티나에서는 反 브라질 감정이 팽배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브라질 정부가 지급하는 막대한 보조금과 헤알화 평가절하에 현혹되어 자국소재 회사들이 공장을 폐쇄하고 브라질로 이전하고 있는데 대한 제재를 주장하였다. 반면, 브라질은 섬유덤핑 수출을 이유로 아르헨티나가 부과한 수입 쿼터에 대해 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반감은 이내 완화되었으며, 아르헨티나 언론들은 자국 소재 기업들의 브라질 행에 대한 업계 로비스트들의 과장된 주장을 회의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아르헨티나 정부는 섬유 쿼터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MERCOSUR 중재패널의 평결을 수용했다. 또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5년간의 회담 끝에 양국간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교역상의 제한조치를 2006년까지 단계적

으로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2000년 4월 양국의 외무 및 재무 장관들은 MERCOSUR를 재 출범키로 합의하였다. 양국은 무역블록을 심화시키는데 필요한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길 희망하고 있으며 양국 경제를 조화시킴으로서 최근에 발생했던 무역마찰 요인들을 제거하기로 희망하였다. 이를 위해 유로화를 출범시킨 마스트리히트(Maastricht) 조약과 유사한 경제수립목표를 담고 있는 “Mini-Maastricht” 체결을 위한 시한을 설정하기에 이르렀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MERCOSUR 역내 무역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 아르헨티나는 분쟁 발생시 지금처럼 임시적인 패널을 구성하는 방식 대신에 상설법정을 설립하길 오랫동안 희망했으나 브라질은 주권문제를 내세워 상설법원은 유럽연합의 브뤼셀식 관료주의를 초래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양국은 현재 법적 심리를 관장하게 될 2년 임기의 패널 위원 명부를 구성하는 데에만 합의한 상태이다.

또 하나의 현안은 경쟁보장 조치에 관한 것이다. 아르헨티나는 세금감면, 부지제공 등 아르헨티나 소재 기업들의 브라질행을 중단시킨 수 있는 브라질의 투자 유인 제공을 중단시키기를 희망하고 있는 반면 브라질은 아르헨티나의 섬유 쿼터 같은 MERCOSUR 역내 반덤핑 조치를 철폐할 것을 바라고 있다.

VI. 韓國-MERCOSUR간 경제 관계 전망

우리나라의 총수출 대비 對MERCOSUR 수출비중은 1990년 0.4%에서 1998년에는 1.9%로 증가했는데, 同 비중은 아시아 국가로서는 최고이다. 우리의 주요 경쟁상대국인 일본과 중국의 同 비중은 1.0%이며, 또한 MERCOSUR의 아시아국가로부터 수입 중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는 바, 일본의 同 비중은 1998년 기준으로 3.8%를 기록했으며 우리나라의 비중은 2.7%로 나타났다. 우리의 주요경쟁국인 중국의 비중은 1.9%, ASEAN은 0.9%를 나타냈다.

따라서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에 의한 치열한 시장 선점과 아시아 개도국들의 경쟁적인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MERCOSUR에서 주요 교역상대국으로서 지위를 유지·확대키 위한 방안이 적극 모색될 필요가 있다.

MERCOSUR는 역외국가와의 관계강화를 통한 외연적 확장에도 매우 적극적인 바, 칠레 및 볼리비아를 준 회원국으로 받아 드린 데 이어 인접공동체인 안데스공동체(CAN)와도 FTA 협상을 진행시켜 남미자유무역지대(SAFTA) 실현을 목전에 두고 있다. 특히 MERCOSUR는 2005년 출범을 목표로 세계 최대 경제공동체인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협상에도 중남미국가들의 이해를 대변하여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EU와도 1999년 6월 FTA 협상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와 같은 MERCOSUR의 FTA를 통한 적극적인 대외협력정책은 MERCOSUR와 제도적 관계가 취약하고 현지생산기반이 미약한 우리기업에게는 향후 커다란 시장접근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MERCOSUR의 경제통합 공고화에 따라 역내수출 비중이 증가하는 등 무

역전환 효과가 심화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수출증가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MERCOSUR의 활발한 지역주의 움직임에 대비, 우리기업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외교노력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까지 MERCOSUR에 대하여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지만, 1990년대 들어 지속되어 온 MERCOSUR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경제개방정책에 편승한 시장진출로 이를 역조시켜 커다란 무역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MERCOSUR과의 무역수지는 1993년 흑자로 반전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MERCOSUR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와의 무역수지 적자는 韓-MERCOSUR간 무역불균형 문제가 주요 통상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바, 호혜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투자 및 유·무상지원 확대, 기술협력, MERCOSUR 제품의 적극적인 수입정책 등을 통한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치가 긴요한 실정이다.

MERCOSUR 회원국들은 아시아지역에 대한 관심도와 중요도의 인식 전환이 크게 부각되어 다양한 채널을 통한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통상, 산업협력 그리고 경제협력의 관점에서 韓國-MERCOSUR간 상호 호혜적 협력관계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협력관계 활성화의 노력은 물론 쌍방간의 동일한 관심과 의지가 있어야 하겠지만 MERCOSUR의 중요성, 국제무대에서의 역할과 비중, MERCOSUR 시장형성에 따른 남미시장의 교두보 구축 등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노력은 결국 우리측에서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MERCOSUR 회원국들의 경제협력은 그동안 선진국과의 관계로만 인식되어 왔으며, 현실적으로도 선진국 의존적이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국가와 공동의 관심사와 방향을 부합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다만 한국의 경제적 위상 향상과 기술력에 대한 인정 등으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매우 호전되면서

새로운 대안적인 파트너로 우리를 고려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韓國-MERCOSUR간 경제협력은 일차적으로 협력주체의 주도하에 추진되지만 정부차원의 통상, 산업협력 증진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과 배려가 요구되며, 이러한 정부의 지원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경제협력의 촉진요소가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플랜트 또는 자원개발사업, 한국기업의 현지경영과 관련되는 인프라확충사업 등 투자 진출과 교역활성화에 필요한 종합적인 금융, 조세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이 일반적인 경제협력과 산업협력의 모호한 지원이 아니고 구체적인 목적성 지원을 시도하여 특정 경제 및 산업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을 유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韓-MERCOSUR간의 경제협력은 쌍방의 상대에 대한 인식전환과 이해증진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총체적인 협력 교류관계 구축을 위한 외교협력, 문화협력과 함께 통상, 산업분야의 협력이 병행될 때 비로소 그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분야별 협력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 방향의 설정과 교류 활성화의 구체적인 대안들의 모색이 요구되며, 특히 연구협력, 문화교류, 공동과제 도출 등의 노력으로 각 분야별 협력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김원호 편. 1999. 『한·브라질 21세기 협력비전과 과제』.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원호 외. 1997. 『미주지역 경제통합의 전망과 한국의 대응과제』.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희주 외. 1997. 『중남미 경제의 개혁과 시장특성화분석』. 서울: 산업연구원.
- 김형주. 2000. 『미주경제의 통합 전망과 시사점』. 서울: LG경제연구원.
- 국가정보원. 1999, 2000. 『중남미 정치·경제 리포트』.
- 박윤재·윤현덕. 1994. 「남미경제통합의 현황과 전망 - MERCOSUR를 중심으로 -」. 『지역연구』, 제3권 제3호. 서울: 서울대학교 지역종합연구소.
- 신인섭. 2000. 「MERCOSUR의 경제현황 및 전망」. 서울: 해외경제연구소.
- 외교통상부. 2000년 각호 「월간 중남미 정보」.
- 조희문. 1993. 『남미공동시장(MERCOSUR)』. 서울: 대한무역진흥공사.
- 한국수출입은행. 2000.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추진 현황과 전망」.
- _____. 2000. 「중남미 경제의 회고와 전망」.
- _____. 2000. 「1990년대 후반의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분석」.
- _____. 2000. 11. 「경기회복세 기대에 못 미쳐」.
- _____. 2000. 2. 「신정부 출범이후 경제회복 예상」.
- _____. 2000. 10. 「남미자유무역지대를 위한 첫걸음」.
- _____. 2000. 2. 「MAQUILA산업 활성화 조치와 우리의 시사점」.

[외국문헌]

- Adriano Branco. 1994. *MERCOSUL; Impasse e Alternativas*. Sao Paulo: ADEBIM, V.2.

- Comision Economica para America Latina y el Caribe(CEPAL). 2000. *Estudio Economico de America Latina y el Caribe; Brasil, Argentina, Uruguay, Paraguay.*
- Paulo R. de Alameda. 1992. *MERCOSUL:Textos Basicos*. Brasilia: IPRI.
- Tendencias. 2000. *Economic Outlook; Argentina, Brazil, Uruguay, Paraguay.*
- The Economic Intelligence Unit. 1993-1999. Argentina, Brazil, Paraguay, Uruguay. *The Economist.*

Executive Summary

MERCOSUR: Evaluation of Economic Performance and Its Implications for Future

Heon Deok Yoon

Brazil, Argentina, Uruguay and Paraguay agreed to form a customs union called the Mercado Comun del Sur(MERCOSUR). MERCOSUR created an integrated regional market whose members were committed to liberalizing trade with one another while imposing a common tariff on goods imported from nonmembers. Currently the fourth largest integrated market after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rea(NAFTA), the European Union, and Japan, MERCOSUR has further extended its scope by entering free trade agreements with Chile and Bolivia. MERCOSUR's sheer size gives it considerable market power and influence over trade developments worldwide.

Like other regional trade arrangements that offer preferential terms to member countries, MERCOSUR has generated fair amount of debate on its implications to member and nonmember countries in the region. There are persuasive evidences that MERCOSUR has promoted intra-group trade over outsiders and increased the credibility of the participating governments' commitment to trade reforms. In this article, the impact of MERCOSUR on the trade patterns and growth of the participating countries is explored and evaluated its implications for future of MERCOSUR, and considering also Korean perspectives to MERCOSUR.

尹玄德

브라질 상파울루 Getulio Vargas 대학교 경영학과 졸업(1980)

미국 The Ohio State University 국제경영학 박사(1986)

승실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 원장(現, E-mail: hdyun@saint.soongsil.ac.kr)

著書 및 論文

『물류관리론』 (1999)

“Korean SMEs Toward New Millennium- Status and Prospects”(2000) 외

지역연구회시리즈 00- 16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경제적 성과분석과 한국의 진출방안

2000년 12월 20일 인쇄

2000년 12월 30일 발행

발 행 인 李 景 台

對外經濟政策研究院

발 행 처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전화: 3460-1178 FAX: 3460-1144

인 쇄 금강데이타텍 전화: 2279-6901 대표 송정섭

등 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本書 內容의 無斷 轉載・複製를 금함】

ISBN 89-322-6031-1

정가 5,000원

89-322-6015-X(세트)

MERCOSUR: Evaluation of Economic Performance and Its Implications for Future

Heon Deok Yoon

MERCOSUR은 역외국가와의 관계강화를 통한 확장에도 매우 적극적인데, 칠레 및 볼리비아를 준회원국으로 받아들인 데 이어 인접 공동체인 안데스 공동체(CAN)와도 FTA 협상을 진행시켜 남아미자유무역지대(SAFTA) 실현을 목전에 두고 있다. 특히 MERCOSUR는 2005년 출범을 목표로 세계 최대 경제공동체인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협상에도 중남미국가들의 이해를 대변하여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EU와도 1999년 6월 FTA 협상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와 같은 MERCOSUR의 FTA를 통한 적극적인 대외협력정책은 MERCOSUR의 제도적 관계가 취약하고 현지생산기반이 미약한 우리기업에게는 향후 커다란 시장접근 제막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MERCOSUR의 경제통합 공고화에 따라 역내수출 비중이 증가하는 등 무역진원 효과가 심화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수출증대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MERCOSUR의 활발한 지역주의 움직임에 대비, 우리기업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외교노력이 필수적이다.



정가 5,000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37-747 서울시 서초구 임곡동 300-4
TEL: 3480-1175 FAX: 3480-1147